

# 커먼즈 속 불화찾기

## - 연구하는 다섯 명의 협력적 글쓰기 실험 -

이태영<sup>1</sup>, 김지혜<sup>2</sup>, 최희진<sup>3</sup>, 현우식<sup>4</sup>, 홍지은<sup>5</sup>

[<sup>1</sup>제주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sup>2</sup>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sup>3</sup>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sup>4</sup>제주대 사회학과 박사수료, <sup>5</sup>충북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 <목차>

1. 들어가며 .....	2
2. 커먼즈로부터의 불화 : 현우식으로부터 .....	3
1) 커먼즈로부터의 불화: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집담회를 복기하며 .....	3
2) 언-커먼센스: 공동으로 호명된 것 속의 차이를 감각하기 (김지혜) .....	6
3) 허공에다 팔을 휘저으며 끌어안다 (최희진) .....	7
4) 커먼즈(네트워크)로부터의 초대와 주변의 이야기 (홍지은) .....	8
5) 생산(38회), 제한(31회), 권력(30회), 사회(26회), 운동(21회) (이태영) .....	9
6) 불화로부터의 초대 (다시 현우식) .....	10
3. 커먼즈와 국가, 그리고 재정 : 이태영으로부터 .....	11
1) 커먼즈와 국가, 그리고 재정 .....	11
2)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접근과 그 관계: 비판이론-정치철학적 접근과 경험과학-재정사회학적 접근 (현우식) .....	15
3) 숫자의 유통: 교환가능한 사례 찾기 (김지혜) .....	16
4) 커먼즈와 연결-해체하기: 신도시 개발-기금-사회적 부동산 (최희진) .....	17
5) 재정사회학에 커먼즈 덧붙이기?: 공동(common)과 공공(Public)의 관계 설정에 남겨진 문제들 (홍지은) .....	18
6) 첫 번째 응답 (다시 이태영) .....	19
4. ‘모두의 것’으로 향하는 커먼즈 정치? :홍지은으로부터 .....	21
1) ‘모두의 것’으로 향하는 커먼즈 정치? .....	21
2) 발달한 경합의 장을 위하여 (최희진) .....	24
3) ‘모두’로 가기 전에 ‘우리’를 재구성하는 커먼즈 정치 (이태영) .....	25
4) ‘커먼즈 정치론’의 딜레마 (현우식) .....	26
5) 특수욕망과 보편의 욕망의 이중주 (김지혜) .....	27

6) 답변: ‘우리’와 ‘모두’의 사이/경계에서 (다시 홍지은) .....	28
5. 커먼즈를 다시 보기 :김지혜로부터 .....	29
1) 커먼즈를 다시 보기: 언제나 부부인, 언제나 움직이는 이야기 .....	29
2) 사이의 지대로서 커먼즈가 지니는 난해함 (홍지은) .....	33
3) ‘사이 지대로서의 커먼즈’의 정치적 성격과 그 함의 (현우식) .....	33
4) 그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태영) .....	35
5) 커먼즈, 교차하는 사이 지대, 시공간적 맥락에서 (최희진) .....	36
6) 사고는 홀로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김지혜) .....	37
6. 커먼즈의 소통, 중얼거리다, 멀멀(murmur) : 최희진으로부터 .....	38
1) 커먼즈의 소통, 중얼거리다, 멀멀(murmur) .....	38
2) 커먼즈 논의는 적막하다? (이태영) .....	41
3) 커먼즈 논의의 중얼거림과 이해의 문제 (홍지은) .....	42
4) 커먼즈 논의를 향한 미학적 탐구가 꿰뚫는 것, 그리고 지나친 것 (김지혜) .....	43
5) 중얼거림에 대한 중얼거림 ... 이 낯은 우연한 해방의 순간에 대하여 (현우식) .....	44
6) 동료들의 답장에 대한 답장, 무위와 작위 사이에 (다시 최희진) .....	45
7. 나가며 .....	46

## 1. 들어가며

커먼즈(common)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사회운동 영역과 학술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커먼즈라는 개념의 활용은 대단히 다양한데,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를 활용하는 논의에 공통점이 있다면 커먼즈와 관련된 논의들이 연구와 실천을 연결하거나 통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이같은 특성이 커먼즈 논의에 역동성을 더했고, 그 역동성은 커먼즈라는 개념의 확산에 기여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역동성이 커먼즈 논의의 곤경을 야기한다. 커먼즈를 활용하는 활동가나 연구자들이 “그래서 커먼즈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역설적인 곤경 말이다.

이 글을 작성한 연구모임 ‘커먼센스 인 커먼즈’(Commonsense in Commons)는 이러한 곤경을 접한 5인의 연구자 동료들이 결성하였다. 커먼센스 인 커먼즈는 “그래서 커먼즈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커먼즈라는 개념을 둘러싸고 존재하는 말들 사이의 불화, 욕망 사이의 불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좀 더 주목했다.

연구모임 ‘커먼센스 인 커먼즈’는 커먼즈 논의의 곤경을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다뤄보기로 했다. 첫째, 각자가 감각하는 커먼즈 논의의 불화, 혹은 곤경은 무엇인가? 둘째,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그 차이를 확인하고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연구모임 ‘커먼센스 인 커먼즈’의 구성원들은 논의 끝에 두 가지 문제의식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였고, 이 보고서는 그러한 시도를 정리한 문서로서 연구하는 다섯 명이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협력적 글쓰기의 실험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임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의식을 정리한 발제문을 제출했다. 그리고 서로의 글에 릴레이로 논평문을 작성했다. 논평문은 최초 발제자의 문제의식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앞서 작성된 논평문의 문제의식까지 포괄하여 작성하였고, 그 순서는 모임 구성원들의 합의로 정해졌다. 그리고 마지막엔 다시 최초 발제자가 모두의 논평에 대한 응답을 작성하였다. 글쓰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온라인/오프라인 세미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해 각자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질문을 직접 확인하고, 문서 바깥의 맥락을 통해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두텁게 채웠다.

아래 2장부터 6장까지 이어지는 총 5장의 글은 5명의 발제자로부터 시작한 토론의 기록이다. 이상의 문제의식과 방법론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 2. 커먼즈로부터의 불화 : 현우식으로부터

### 1) 커먼즈로부터의 불화: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집담회를 복기하며

이 글은 필자와 동료들이 커먼즈(communs) 연구와 활동 영역에서 느낀 불화(mésentente)의 감각을 언어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여기서 불화란 랑시에르적인 의미에서 같은 것을 말하지만 서로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상황을 말한다. 그것은 “하양다고 말하는 사람과 하양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의, 하지만 같은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또는 상대방이 하양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갈등이다”. 불화는 무지로 인한 몰인식(méconnaissance)이 아니며, 단어들의 부정확성에서 비롯하는 오해(malentendu)도 아니다(랑시에르, 2015: 17). 불화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발화하는 주체들의 자격 및 그들 사이의 갈등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느낀 ‘커먼즈로부터의 불화’는 한국 커먼즈 연구와 활동이 구조화되는 방식과 그것이 개별 행위자들에게 미치는 효과와 관련이 있다. 이 글은 2022년 10월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에서 열린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집담회를 복기(復棋)하면서 커먼즈로부터의 불화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를 제출하고자 한다. 집담회는 2017년 결성된 커먼즈 연구자·활동가 집단인 ‘커먼즈 네트워크’가 커먼즈 운동의 사회적 확산과 연대를 위하여 다양한 사회운동 주체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필자와 동료들은 모두 이 집담회에 참여하였고, 각자의 방식대로 불화를 감각했다. 그리고 그 감각은 이 글이 쓰여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 불화의 감각들을 복기하면서 이 감각들이 커먼즈 네트워크로 대표되는 한국 커먼즈 연구와 활동의 특정한 맥락과 닿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 (1) 집담회의 화두: ‘제한권력’과 ‘생산양식’

먼저 당시 집담회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집담회의 화두는 단연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이었다. 대부분의 논의가 이 두 단어를 경유하여 이루어졌다. ‘커먼즈로부터의 초대’와 두 개념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집담회가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기획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참가 제안서를 보면, 이 집담회가 “현재 한국 사회 커먼즈 운동의 여러 현실과 방향들에 대해, 사회운동 주체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듣고, 입장들의 차이를 넘어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전환의 과제, 전환의 정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공동 언어, 공동 분석, 공동 일정을 함께 찾고자”하는 목적으로 기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커먼즈 운동은 “단지 몇 사람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자산화’를 추진하는 폐쇄적인 생존 전략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자원, 서비스, 제도, 관계의 공동 생산·관리는 물론 민주적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자유로운 공동체의 범위가 민주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새로운 정치적 실험”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집담회의 중요한 목적이 커먼즈 운동을 공동체 수준을 넘어 체제 수준의 전환정치로 끌어올리는 데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2022년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의 부제인 “공공성(公共性) 회복을 위한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은 이런 맥락에서 요청된 것이다.<sup>1)</sup>

제한권력이라는 단어는 포럼 첫날 운영광의 발표인 「커먼즈의 제한권력: 공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시론(試論)」(운영광, 2022)에서 등장한다. 제한권력이란 “국가와 헌법으로 표상되는 공적 질서를 창출하고 정초하는 힘”을 의미한다. 이는 커먼즈와 공공(公共) 부문의 상호구성적 관계 혹은 구성적 힘에 주목하는 소위 ‘커먼즈의 정치’론과 공명한다(정영신, 2020; 홍덕화, 2022). 커먼즈의 구성적 힘은 언제나 공(公)적인 것과 공통(共)적인 것 사이의 긴장에 노출되어 있는데, 제한권력은 이 긴장을 인식적·실천적 관점에서 적절히 사고하게 해줄 수 있는 개념으로 제시된다. 여기에는 현재의 헌정질서를 규정하는 사적 소유의 논리를 드러내고 사화(私化, privatization)에 맞서 공통적인 것을 헌법에 투입시킴으로써 헌법 자체를 계급투쟁의 장(場)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집담회의 주요 참가자들은 제한권력을 체제 수준에서의 전환정치가 우회할 수 없는, 동시에 곤란한 국가 혹은 근대국가의 사회적 구성이라는 문제를 사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을 지역정당 운동가로 소개한 윤현식은 이 개념이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화전략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한국에서 지난 20년 간의 거버넌스 전략이 “기득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알리바이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인식이 깔려 있다. 박배균은 제한권력을 사적소유권을 전제로 한 근대적인 국가, 퍼블릭에 대한 상상을 넘어서는 힘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한권력은 근대성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주체성에 대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개념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이원재는 제한권력이 그렇게 새롭고 중요한 논의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는 박배균과 달리 제한권력이 불러 일으키는 상상력이 인간중심적이며, 체제전환보다도 더 뒤쳐지는 이야기라고 본다. 또한 윤현식의 입장에 대해서도 ‘거버넌스=개량’이라는 비판이 “구좌파적 상상력”이자 “언어게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거버넌스와 정책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논의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 이승원은 제한권력이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커먼즈와 제한권력을 연결시킨 시도가 커먼즈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전시킨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다양한 정책과 입장들이 각각의 정체성을 발휘하기 보다는 함께 모여 ‘우리’를 만드는 정치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서현은 제한권력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 구조에 입각해 사회가 짜여져 있는 방식(constitution)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상상력을 열어준다고 본다. 그에게 이 문제는 “오늘날의 있어서 맑스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적 소유와 사회적 생산이 모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체제이다. 제한권력은 협력적인 생산과정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

1) 이는 한국 커먼즈 연구와 활동의 핵심 특성인 공공성과 공동성의 분리와 관련이 있다. 장훈교(2022)는 한국에서 공공자원의 민영화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의 주도담론인 &공공성&이 2010년대를 경유하면서 서서히 쇠퇴하였고, 이 자리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 복지국가운동이 차지한 가운데, 공동자원화 운동이 주변부에서 &공동성&을 주창하는 일상생활세계 운동으로 드러났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이는 공동자원화 운동이 공공성과 분리된 특정한 공동체의 영역으로 국한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로 인해 공동자원체제(communs)를 전체 사회의 변화와 연결해 사고하는 데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공성 회복을 위한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을 표방한 2022 커먼즈 네트워크 워크숍은 공공성의 영역을 공동자원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를 새롭게 조직하는 힘으로 여겨진다. 그에게 커먼즈는 생산의 과정, 토대, 결과이기도 한 것인데, 이러한 생산이 오늘날의 법적 체계 안에서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

제한권력과 관련된 논의가 주로 커먼즈와 정치적인 것(근대 국가)의 관계를 문제삼는다면, 생산양식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커먼즈와 경제적인 것(생산)의 관계를 문제삼는다. 김상철은 자신이 생각하는 커먼즈 운동이 ‘생산’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커먼즈 운동이 자본주의적 재화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공동생산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원재는 생산양식이라는 개념을 비판적으로 본다. 커먼즈를 생산양식으로 보게 되면 커먼즈 정치가 물리적 자원에 관한 문제로 환원되고 경제 환원주의, 생산력주의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한디디는 물질적인 것과 관계적인 것, 경제와 문화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물의 물질성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생산양식 개념을 풀라니가 이야기한 사회에 착근되어 있는 살림살이의 생산양식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며,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감각’이나 주체성의 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담회에서 생산양식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커먼즈 운동이 체제 수준의 전환 정치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생산이라는 문제를 우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문제와 같이 동시에 곤란한 문제이기도 한데, 이 문제는 생산양식에 대한 개념 논쟁으로 드러났다. 논쟁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생산양식을 주체성의 생산이라는 의미에서 바라보고자 했다. 다만, 김상철은 주체 형성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적 의미에서의 생산의 문제가 방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원재는 물질적 생산의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주체 구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 결론을 대신하여: 어떤 불화의 순간들

한편으로 집담회에서는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을 둘러싼 지배적 분위기와 불화하는 순간들이 존재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최희진이었다. 그는 커먼즈 주체를 이야기할 때 “주변부에 있는 우리들 얘기”를 먼저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서의 공론장에서도 바로 끼지 못하는 주변화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작은 연대”를 신뢰하며 세상을 “조직화”로서 바꿀 수 있는가에 회의적이라면서 집담회의 주요 참가자들이 강하게 믿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자신에게는 조금은 “멀게 느껴진다”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최희진만이 아니다. 어린은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자발적으로 주변부로” 왔다고 말하면서 여기서 나온 쟁점들, 논쟁들이 하나로 합의되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는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긴다. 그리고 커먼즈라는 언어가 “빈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확장된, 동물의 얼굴들에서, 또 여성의 얼굴들에서, 그런 얼굴들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인다. 김석준은 정치랑 제한권력과 같은 무거운 얘기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자신이 20대를 대표하고 청년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입장이 자신의 “주변적인 위치”와 어느정도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해미 역시 “주변적이라고 자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논리가 설득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남긴다. 홍지은은 “더 넓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이 집담회의 목적에 대해서도 “여전히 연결의 지점에 대해서 고민을 뺏어갔다고 할 수 있나”는 의문이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운동과의 연결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말한다. 김지혜는 “일단 만나는 자리가 생겨서” 좋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빈 공간에서 커먼즈를 상상하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 속에서 상상하고, 여기 지금 이곳에서 상상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의견들은 대부분 집담회 말미에 짙막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이들은 대체로 자신이 이 집담회에서 “주변부”에 있다고 느

졌으며, 집담회에서 오가는 논의가 다소 추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반복되는 불화의 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담회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담회의 사회자 윤여일은 집담회 내용을 정리하면서 커먼즈와 관련된 논의가 운명처럼, ①이 논의를 꾸준히 계속 참여하는 사람들, ② 이 개념 자체가 생경한 사람들, ③ 일정 정도 오염되어서 뭔가 끊는 사람들, ④ 아직 되게 혼란스러운 사람들, ⑤ 이 개념 빠져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매번 모여서 리셋되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2017년 (커먼즈 네트워크가 결성된) 이후 이런 자리가 10번 이상 반복되다 보니 “매번 참가자들에 의해서 자리는 계속 다시 새로 세팅되지만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승원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집담회는 마무리되었다.

이 뜨거운 박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적어도 여기에는 남겨진 어떤 불화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는가? 왜 같은 커먼즈를 이야기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 단지 논의의 익숙지 않음의 문제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몰입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화”시키는 이 열띤 논의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역사적 맥락은 무엇인가? ‘커먼즈로의 초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남겼다. 그리고 이 집담회의 참가자이기도 했던 우리는 못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 한다.

## 2) 언-커먼센스: 공동으로 호명된 것 속의 차이를 감각하기 (김지혜)

「커먼즈로부터의 불화」는 어떤 장면들을 포착한다. ‘공통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발동하는 불화의 장면들. 언어 속에 담긴 열망으로 달구어진 분위기, 차이 나는 관점 속에서도 공통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열정적인 소통, 그리고 초대된 순간에도 초대받지 못한 것처럼 주변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 그 장면 속에 있었던 나는 마지막 장면의 주변화된 존재였다. 왜 나는 주변부에 있었을까? 사실 나는 사회자로부터 중간에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배려에도 손사래를 치며 할 말이 없다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아마 나의 의견을 듣고 싶었던 사회자는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불쑥 손을 든 내가 이상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떤 것들은 대화의 중간에 개입하기에는 불화의 정도가 너무 커서 대화가 끝난 뒤에 침언 정도로만 남겨져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왜 개입하지 않고 침언하였을까? 차이들은 공통의 지대를 전제할 때 의미화되지만, 그 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잠음으로 기화한다. 내가 말하지 못한 것은 기화될 것이라는 불안감, 대화의 즐거움을 죽일 것 같은 느낌(killjoy; 아메드, 2023)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포착한 것은 나 혼자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서 마지막 침언을 메꾸었던 사람들은 어쩐지 그 열띤 분위기 속에 편입되지 못한 채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초대받은 ‘우리’가 공통의 지대 밖에 있다는 것을 감각하였다.

그날의 공통 지대는 무엇이였을까. 현우식의 글이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것은 커먼즈를 통한 공공성의 재기획이고, 커먼즈를 통한 헤게모니 장악이다. 커먼즈는 여기에서 더 나은 권력을, 더 나은 국가를, 더 나은 생산양식을 위한 수단이다. 이 논의에서 공(公)적인 것과 공통(共)적인 것의 변증법적 해소야말로 커먼즈 운동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논의에서 작은 것들은 작은 채로 살아 나갈 수 없다. 그것은 큰 것이 되어야만 한다.<sup>2)</sup> 나의 불화 감각은 전체로 나아

2)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은 윤영광(2022)의 논의와 일부 배치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성급한 해소를 비판하면서 제한권력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커먼즈의 제한권력은 커먼즈를 근본적인 것으로, 공적인

가는 열망,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되려는 열망을 알아듣지 못함에 있다. 공통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잔여로 남겨질 부분적인 것들을 생각한다. 공통적인 것이 제헌권력으로서의 추상이 되었을 때의 난감함을 생각한다. 공통적인 것은 언제나 무엇과 무엇의 공통적인 것이 아닌가? 그 ‘무엇’이 없는 공통의 추상화 속에서도 대화는 가열됐다. 하지만 정말로 추상화된 공통이란 실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이 빈 기표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아마도 내가 이날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한 불화하는 존재였기 때문일 것이다.

### 3) 허공에다 팔을 휘저으며 끌어안다 (최희진)

현우식의 글은 커먼즈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일원으로서 느끼는 불화의 감각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는 랑시에르의 언어를 차용하여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과 검다고 말하는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닌 하얗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통,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불화의 감각을 말한다. 커먼즈라는 언어를 둘러싼 불화는 커먼즈를 말하는 우리의 자격,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의 쟁점을 드러낸다. 한국 사회 맥락에서 커먼즈의 어떤 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연구자와 활동가의 욕망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되레 ‘커먼즈로부터의 불화’를 감각하는 사건과 장면을 마주한다. 앞서 현우식과 김지혜의 글에서처럼, 커먼즈네트워크 집담회에서는 전환정치로 나아가고 “끌어올리는” 일에 몰입하여 달궜진 분위기였으나, 주변부에서 나온 탄발은 찬물을 끼얹는 소리이자 잠음이다. 비죽 튀어나온 소리를 향한 어색한 귀 기울임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공통 감각을 길어 올린다.

커먼즈네트워크는 포럼, 워크숍, 비대면 모임 등 여러 형태로 만나서 커먼즈를 둘러싼 사회운동과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할 뿐 아니라 커먼즈에 대한 이론화 내지 규모의 상승을 구상한다. 특히 커먼즈네트워크 포럼은 인천 배다리마을, 경의선공유지, 서울혁신파크, 서울시 동북권역마을배움터 등에서 개최하여 어떤 적대에 맞서 연대하는 데 집중한다. 주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행정과의 권력관계, 제도적 지원의 부재와 갈등, 내물림 등에 대항하여 공유지를 지키는 일에 함께 결의를 다진다. 또한 이들은 커먼즈 현장과 운동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하거나 도시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예시정치(윤여일, 2022; 이승원, 2023)의 성격을 찾으나, “전환적 규모로의 상승 문제”에 직면한다(장훈교, 2022; 윤여일, 2022에서 재인용). 앞서 현우식의 글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커먼즈네트워크 포럼에서 다루는 논의는 “공동체 수준을 넘어 체제 수준의 전환정치”를 화두로 삼는다. 지난 포럼에서도 “제헌권력”을 체제 수준에서의 전환정치로 향하는 단서이자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런 단서는 “곤란한 국가”에 비집고 들어갈 틈, 아니, 전복할 힘을 갖는 걸까.

사실 나는 현우식과 김지혜의 글을 참조하며 커먼즈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한 기억을 되짚어보는데, 커먼즈 운동-연구-정치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한 의구심이 새어나온다. 나의 정치철학적 사고의 한계 탓일지도 모르나, 안타깝게도 나는 공통적인 것 자체의 제헌적 역능을 주창하는 공통 지대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커먼즈네트워크 활동을 유지하고 이어가는 데 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애씀, 애정을 찬탄한다. 커먼즈네트워크 행사 기획안과 행정서류를 만질 때에도, 커먼즈 운동과 연구를 말할 때에도, 온라인 작은 포럼을 진행할 때에도, 커먼즈네트워크 홈페이지를 새로 연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도, 커먼즈 논의가 도로 돌아갈 때에도,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불화의 감각 속에서, 우리는 공통의 추상화를 둘러싼 액자이자 파레르곤이 된다. 커먼즈를 둘러싼 언어에 덧붙인 말에 또 덧붙이는 말을 하면서 허공에 팔을 휘저으며 불화를 일으키자.

### 4) 커먼즈(네트워크)로부터의 초대와 주변의 이야기 (홍지은)

---

것을 그 근본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논의함으로써 공동에 선행하는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커먼즈를 열망한다.

누군가 커먼즈 네트워크 집담회의 후기를 묻는 말에 나는 ‘오히려 길을 잃었다’는 표현으로 응답한 적이 있다. 집담회에서 열정적인 논의가 오갔고,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낀 이도 있었으나 나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련의 혼돈과 불화를 느꼈다. 현우식의 글은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집담회에서 느낀 이러한 불화의 감각을 복기하고 주변부의 자리를 비추어 본다. 그의 글을 따라 되짚어 보면, 이날 집담회에서는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이 주요한 화두로 제시됐다. 이는 체제 수준의 전환 정치를 위한 ‘공동’의 ‘우리’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집담회의 목적과도 이어져 있다.

집담회의 제안문에는 “공동 언어로 공동 분석을 위한 사회운동의 민주적 공론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운동은 분화와 고립화 되어가고, 대안적 민주주의의 정치를 위한 실험은 점차 주변화되는 듯”하다는 진단이 담겨있다. 그리고 “한국의 사회운동이 이러한 나쁜 경로에서 탈출하여, 정치를 민주적으로 회복하고, 이것이 다시 반동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적 공동자원과 공동 실천을 위한 ‘커먼즈’의 정치, ‘커먼즈’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sup>3)</sup>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집담회는 공동의 것이 취약한 상태에서 주변화되는 여러 사회운동을 연결하고 엮어내면서 “포괄적인” 전환과정에 함께할 ‘우리’를 만들어 내려는 기획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을 공동의 논의 주제로 삼으며 진행된 집담회의 다른 한편에는 불화하는 감각이 있었다. 이 열띤 논의에 연결되지 못한 이들은 “주변화된 목소리”에 관해서 그리고 “주변적인 위치”에 관해 이야기했다. 어린과 김지혜는 집담회의 논의가 “빈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표현한다.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으로 채워진 논의에 누군가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감각을 느꼈지만, 그 주변부에는 이 논의가 비어 있다고 느낀 이들이 있었다. “각각의 정체성을 발휘하기보다는 함께 모여 ‘우리’를 만드는 정치”에서, 단일한/보편적인 무언가로 모아내는 ‘연대와 협력’의 시도/초대로부터 다시 ‘주변’이 생겼다. 커먼즈(네트워크)로부터의 초대는 ‘주변화’된 운동을 연결해보려는 시도였지만, 주변부로부터의 초대가 다시금 ‘주변’을 만들었다.

이날 집담회가 진행되기 전에는 5년간의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는 공동 활동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 지도 그리기>이 있었다. 공동 활동으로 기획된 이 자리에서도 어떤 계보를 따라, 어느 자리에 각자의 논의를 위치시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무엇이, 우선하거나 중심에 위치해야 하는지 하는 난감함을 느꼈다. 이 지도 그리기의 과정에서도 자리를 찾지 못한 주변부의 이야기가 있었다. 커먼즈(네트워크)의 지형에 위치하지 못한 채 새어나가는 주변의 이야기였다. 커먼즈 운동에서 차이는 곧 ‘넘어서’야 할 과제로 다뤄지는 데, 이 지점에서 제 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는 주변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김지혜가 말한 ‘차이의 감각’을 어떻게 다룰지의 고민과도 연결된다. 집담회의 논의는 차이를 ‘넘어선’ 채로 만들어지는 ‘공동’이 오히려 불화를 말할 수 없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건 아닐지 하는 질문을 남겼다.

3) 웹진 공유도시 2022년 12월호. [커먼즈 네트워크 소식] 2022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 + 공유도시 박람회 리뷰.



우식의 지적처럼 집담회 전날 있었던 포럼 발표의 영향력이 집담회로 이어졌다가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나눠서 해볼 수 있겠다. 왜 커먼즈 포럼에서 제헌 권력이 다뤄졌을까?(발제자 선정에 따른 우연적인 결과인가) 왜 집담회에선 유독 제헌 권력이 다시 주목받았을까?(포럼에서 언급된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두 가지 질문에 정확한 답을 구하는 시도는 무용하면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두 질문은 그저 커먼즈 논의의 어떤 경향을 이해하는 사유를 풍성하게 하는데 활용하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두 가지 질문과 연관된 한 가지 단서는 집담회를 여는 이승원 선생님의 발제가 ‘정치의 회복’을 주제로 다뤘다는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사실 나에게 ‘제헌 권력’이라는 개념과 함께 그날 집담회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치’였다. 그런데 발제자의 발표를 제외하고 ‘정치’라는 단어는 집담회 녹취록에 8번 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비슷한 빈도로 등장한 단어는 마르크스(7번), 헌법(7번) 정도가 있다. 그렇다면 나는 왜 그날의 집담회가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을까? 우선, 발제에서 등장한 논제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날 잦은 빈도로 언급된 다른 개념들, 즉 ‘제헌’, ‘생산’, ‘권력’과 같은 단어들이 정치를 구성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기억들을 비약적으로 종합해보자면, 집담회의 화두로 ‘제헌 권력’이 자리하게 된 것은 하루 전날 포럼의 발제 내용과 집담회를 준비한 주요 논자가 제시한 ‘정치의 회복’이라는 논점이 ‘제헌 권력’이라는 인상적인 키워드를 집담회의 중심으로 초대할 것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날 다뤄진 ‘정치’는 유독 ‘제헌’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다. ‘정치’라는 논제가 ‘제헌 권력’으로 소구되었던 그날의 논의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 과정이 집담회에 불화의 순간을 만들어낸 한 요소일 수도 있다.

다시 녹취록의 단어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 ‘생산’과 ‘제헌’, ‘권력’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개념어에는 무엇이 있을까? 사회(26회)와 운동(21회)가 그 뒤를 잇는다. 커먼즈 논의에 잦은 빈도로 등장한 ‘제헌’, ‘생산’, ‘권력’, ‘사회’, 그리고 ‘운동’이라는 단어들. 불화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자는 현우식의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 짧게 답해보자면, 나는 바로 이 단어들의 조합이 질문으로 남았다. 정치의 회복으로서 커먼즈의 담론화를 고민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논의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 정치의 정당이나 정책 수준이라기보다는 ‘제헌’과 ‘생산’이었다. 그렇다면 강조된 ‘사회운동’은 ‘제헌’ 수준의 정치를 지탱하는 것이었을까? 여기서 빠진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사회운동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 누락되었다고 생각한다. 질문이 누락되면 편협한 이해가 힘을 얻고, 편협한 이해를 전제로 한 논의는 불화를 야기한다. 집담회에 대한 나의 기억을 복기하고, 집담회를 복기한 동료들의 글을 읽으며 내가 갖게 된 인상이다.

#### 6) 불화로부터의 초대 (다시 현우식)

우리의 모임은 2022년 10월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커먼즈로부터의 초대’ 집담회는 우리 각자에게 무언가 찻찻한, 해명되지 않는 감각을 남겼던 것 같다. 그 감각은 우리들의 공통감각이 될 수 있을까? 이 릴레이는 이 물음으로부터 출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난 포럼이 우리의 감각을 나눌 수 있는 공통의 준거점으로서 충분히 기능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이 릴레이는 다른 릴레이 글에 비해 서로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부각된 것 같다.

김지혜는 자신이 ‘주변부’에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떠올린다. 왜 스스로 주변부에 머물렀냐는 질문에 그는 공통의 지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잠음으로 기화될 것 같은 불안감을 언급한다. 여기서 공통의 지대란 김지혜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公)적인 것과 공통(共)적인 것의 변증법적 해소”가 일어나는 지대이다. “이 논의에서 작은 것들은 작은 채로 살아 나갈 수 없다. 그것은 큰 것이 되

어야만 한다”. 나는 이 문장이 소위 커먼즈 정치론의 이론적·정치적 지향을 직관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공통의 지대는 어디론가 달려가기를 원한다. 그래서인지 공동체 수준, 미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예시적 실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김지혜의 불화는 “전체로 나아가는 열망,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가 되려는 열망을 알아듣지 못함”에서 비롯되었다.

최희진 역시 커먼즈네트워크가 “커먼즈에 대한 이론화 내지 규모의 상승” 혹은 “전환적 규모로의 상승”을 열망해 왔음을 느낀다. 이는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이 지향했던 “공동체 수준을 넘어 체제 수준의 전환정치”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분명히 커먼즈네트워크 활동을 유지하고 이어가는데 들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 애씀, 애정을 느끼고 있다. 김지혜가 언급한 “공통의 추상화”에 “공통의 추상화를 둘러싼 액자/파레르곤”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우리’를 기입시킨다. 여기서 우리는 단지 주변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커먼즈를 둘러싼 언어에 계속해서 말을 덧붙이면서 불화를 일으키는 존재들이다.

홍지은은 집담회가 진행되기 전 5년간의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을 정리하는 공동활동인 <커먼즈 네트워크 활동 지도 그리기>를 언급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어떤 계보를 따라, 어느 자리에 각자의 논의를 위치시켜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무엇이, 우선하거나 중심에 위치해야 하는지 하는 난감함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서로의 활동을 연결하고자 하는 이 시도가 그에게는 차이를 ‘넘어서’고자 하는 시도로 여겨졌는데, 그는 오히려 차이를 ‘넘어선’ 채로 만들어지는 ‘공동’이 오히려 불화를 말할 수 없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는 건 아닐지 하는 질문을 남긴다. 물론 이 지도 그리기와 집담회가 차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차이의 감각’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다.

이태영은 집담회 녹취록의 단어를 추출, 분석하여 ‘생산양식’과 ‘제한권력’이 당시 집담회의 화두였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나는 그가 마지막에 말한 부분을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회운동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이다. 나는 그가 사회운동 주체와 연결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잠재하는 사회운동은 옳은 것이며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 판단 자체를 의문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은 사회운동을 규범적으로 지향하는 조직일수록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다. 기존 커먼즈 논의에서 “현실 정치의 정당이나 정책 수준”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태영이 보기에 질문이 누락되면 편협한 이해가 힘을 얻고, 편협한 이해를 전제로 한 논의는 불화를 야기한다. 누락된 질문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불화를 가시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담론에 균열을 일으키는 실천일 것이다.

‘커먼즈로부터의 초대’가 커먼즈의 정치를 확장하기 위한 시도였다면, 우리의 작업은 그러한 초대와 불화한 자들의 나뭇의 응답이라 할 만하다. 이제 나는 이 글이 단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서 ‘커먼즈로부터의 불화’ 자체를 주제화하고 또 어디선가 불화를 느끼고 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불화를 일으켜야 한다. 누군가에게는 공통의 지대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즐거움을 킬조이(killjoy)하는 불편한 글이 될 수 있지만,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당신은 이 불화로부터 초대를 받은 것이다. 당신은 무어라 응답할 것인가? 이제 당신의 차례이다.

### 3. 커먼즈와 국가, 그리고 재정 : 이태영으로부터

#### 1) 커먼즈와 국가, 그리고 재정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어떤 커먼즈 논의의 맥락에서 국가는 넘어서야 할 대상이다. 이 이야기는 하딘(Garrett Hardin)의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1968년 하딘이 발표한 논문 “The Tragedy of the Commons(공동자원의 비극)”은 인류가 전쟁, 질병, 밀렵 등 변수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여 인구 과잉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가속화된 인류 과잉의 문제는 공동자원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딘의 주장은 책임성과 같은 개인적 덕목에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하딘은 책임이란 명확한 사회적인 배치의 산물이며, 책임감을 만드는 사회적 배치는 어떤 종류의 강제를 만드는 배치라고 지적한다. 이렇듯 하딘의 논의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동의된 상호강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전통적인 역할을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경고가 시장화, 민영화의 근거로 활용된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다. 아마도 이견 1970년대 서구, 특히 영국과 미국 자본주의의 변화가 하딘으로부터 촉발된 자원관리의 문제에 개입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전후 세계자본주의는 국민국가 중심의 질서로 재편되었다. 고정환율제와 자본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브레튼우즈 체제와 이에 조응하는 정치경제 전략으로서 케인즈주의는 국가의 역할을 중요하게 다뤘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이 되면서 전후 자본주의 질서는 흔들리게 되고, 1976년 영국 정부의 케인즈주의 정책 폐기, 1979년 미국 정부의 통화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게 되었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케인즈주의가 완전고용을 목표로 재정정책을 활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이를 보완하는 전략이었다면, 신자유주의는 통화정책으로 경제정책을 주도하며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독려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부문은 축소되거나 시장화되는 경향을 갖게 된다. 어쩌면, 1968년 하딘의 경고는 1970년대를 거치며 개인의 책임을 강제하는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논리로 활용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오스트롬(Elinor Ostrom)에 이르러 제3의 길을 찾게 된다. 오스트롬은 공동자원을 둘러싼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되고 있는 기존의 모델들을 검토한다. 대표적으로 국가와 같은 강력한 외부 강제력의 개입을 통한 대응이 있다. 이러한 대응은 하딘의 주장과 연관된다. 또 다른 모델로는 사유재산권의 설정을 통한 대응이 있다. 상품화, 시장화가 공동자원의 파멸을 막을 것이라는 관점이다. 아마도 이같은 관점은 하딘의 경고가 1970년대를 관통하며 확장된 신자유주의적 자원 관리 패러다임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롬은 국가(강력한 강제력)나 시장(사유재산권)이 아닌 경로, 즉 자발적인 집합 행동과 자치의 경험을 통해 공동자원의 문제에 대응한 사례들을 연구해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 하딘에서 시작해 오스트롬을 거쳐 퍼져나가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국가는 외부적인 강제력이면서도, 유일한 해법일 수 없는 주체이다. 이 이야기는 국가의 위험성과 관련된 논의로도 연장되는데, 한국을 예로 들면 국가가 소유한 자연자원이 가장 손쉽게 개발에 동원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떤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는 커먼즈의 대상이 된다. 이 논의에서 국가는 커먼즈를 흡수할 수 있는 존재로 다뤄진다.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안토 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마시모 데안젤리스(Massimo De Angelis)가 이러한 논의에서 부각되는 인물들이다. 권범철(2023)은 커먼즈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며 각각의 커먼즈가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 고찰했다. 첫번째, 요구하는 커먼즈이다. 이는 사회운동을 하나의 커먼즈로 이해하는 접근이다. 요구는 국가를 향해 이뤄지곤 하는데, 대체로 구성에 대한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로 회귀할 우려가 있다. 국가를 경유하는 요구는 정치적인 것을 제도정치적인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는 사회운동을 떠받치는 커먼즈에 대한 고민을 우회한다. 두번째, 필요를 채우는 커먼즈이다. 한국에서 전개된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주로 사회의 틈새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커먼즈는 국가와 모호한 관계를 맺으며, 국가 자체가 필요에 대응하는 기구가 되기도 한다. 케인즈주의 국가가 대표적이다. 케인즈주의 국가가 야기하는 운동은 자본주의적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된다. 마지막은 욕망을 실

현하는 커먼즈이다. 흔히 예술 스콧에서 볼 수 있으며, 예시적 정치에 부합하는 유형이다. 그러나 이러한 커먼즈는 그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지역에 집합적 상징자본을 구축하고 이는 국가에 의해 관광자원화될 우려가 있다.

권범철(2023)은 이처럼 세 가지 유형의 커먼즈가 모두 국가와의 특정한 관계 속에서 국가의 정책으로 치환되거나 흡수될 위험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따라서 중요한 목표는 국가가 커먼즈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커먼즈가 국가를 흡수하는 것, 즉 국가의 커머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서 국가는 커머닝의 대상이 된다. 한편, 앞서 살펴본 커먼즈의 또 다른 이야기, 하던으로부터 출발해 오스트롬을 거쳐 커져가는 논의를 비판적으로 읽는 논자들은 커먼즈의 역사와 커먼즈를 둘러싼 권력관계, 재생산의 문제가 이들의 논의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정영신, 2020). 사회구조적 변동의 문제를 소환하는 이러한 접근 역시 국가를 커먼즈를 위협하는 주체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국가를 커먼즈로 재전유하자는 이야기와 어떤 입장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커먼즈 논의는 국가를 파트너로 다룬다.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와 같은 논자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시민사회에서 P2P(peer-to-peer)가 확대되고, 시장은 ‘윤리적 경제(ethical economy)’로 변화하며, 국가는 ‘파트너 국가(partner state)’로 역할하는 삼분 전략을 기획한다(안새롬, 2020). 여기서 파트너 국가는 국가와 시장, 커먼즈를 조정하는 기구로서 정부 규제와 시장 자유, 시민사회의 자율적 프로젝트 간 최적의 혼합 지점을 찾는 역할을 수행한다.

황진태(2023)의 질문도 비슷한 이해를 공유한다. 그는 한국에서 국가를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초래한 주범으로만 볼 것인지 도시 커먼즈 구축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활용할 것인지 질문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국가 없는 도시 커먼즈’ 논의가 부각된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다. 첫째, 한국의 도시 관련 정책이 서구 의존적이기 때문에 서구에서의 도시 커먼즈 사례가 ‘국가 없는 도시 커먼즈’를 사고한다는 것이다. 둘째, 경의선 공유지와 같은 사례에서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국가와의 경험이 ‘국가 없는 도시 커먼즈’ 논의를 쉽게 수용하게 했다는 점이다. 황진태(2023)는 투기적 도시화를 야기한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매력적인 커먼즈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국가가 다시 자산 증식의 대변인으로 돌아가거나 반(anti) 커먼즈 정책에 앞장 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커먼즈 생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커먼즈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국가를 넘어서거나, 국가를 재전유하거나, 국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소환한다. 여기서 국가는 언제나 시장과 함께 자원 관리를 강제할 수 있는 행위자라도, 커먼즈적 대안을 포섭할 수 있는 위협으로도 여겨지고, 특히 한국의 맥락에서는 발전주의적이고 투기적인 도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각각의 논의에서 다루지는 국가가 정확히 무엇을 가르키고 있는지는 불명확하다. 나는 이것이 국가를 무엇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성된 당연한 모호함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가를 이해하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 글에서 다루보고자 하는 문제의식이다. 내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제는 바로 ‘재정(財政, public finance)’이다.

재정사회학(fiscal sociology)은 국가와 사회의 모든 역사가 공공재정에 그 기록을 남기며, 그렇기 때문에 재정은 사회를 연구하는 최상의 출발점이라 강조한다(Schumpeter, 1991[1918]; 김도균, 2018: 15). 재정사회학적 관점에 따르면, 광의의 사회전체를 구성하는 세가지 하부체제,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사회체제 간 상호작용을 조정하는 연결고리에 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재정위기관은 사회전체의 위기로 이어진다(진노, 2000: 20). 세 하부 체제 간 상호작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치체제는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체제로부터 화폐를 조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공공서비스도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사회체제에 공급한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정치체제는 사회체제로부터 ‘충성’을 획득하고, 정치체제는 경제체제로부터 조세를 통해 ‘화폐’를 조달한다(Ibid.: 21).

정치체제는 정당화된 폭력의 행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체제 하에서 영위되는 인간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한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충성’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도모한다(Ibid.: 19).

따라서 국가의 과세행위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지닌다. 과세행위는 근본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국가가 감세전략을 취할 경우 사회적 권리와 사회적 연대의 토대가 취약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찰스 틸리, 2010). 그런 점에서 조세 수준과 공적 지출 수준이 모두 낮은 특징을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한다.

조세 수준과 공적 지출 수준이라는 지표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출발점이다. 김도균(2018)은 서구 유럽에서 조세를 통한 동원이 사회적 권리의 발달과 복지국가로 귀결되었지만, 한국의 경우 조세가 아닌 저축을 통한 동원이 자산기반복지라는 제도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접근으로 일본의 경우 토건국가가 복지국가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미야모토(2011)는 일본의 생활보장이 고용보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일본 고용보장 정책의 주요한 특징으로서 저생산성 부문의 고용창출을 책임진 토건국가의 작동에 주목한다. 일본 자민당은 지방의 건설업, 자영업으로부터 지지 기반을 구축하였고, 공공사업을 통해 지방 건설업에 일감을 제공하는 것은 고생산성 부문과 저생산성 부문의 고용보장을 분리한 일본 생활보장 전략의 중요한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건국가는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과 대인(對人)사회서비스를 특징으로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사업과 낮은 조세분담률을 조합한 경제대책·재분배정책을 특징으로 한다.

이처럼 재정사회학적 관점을 경유할 때 국가는 조세 타협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조세 타협은 사회체제와 경제체제를 연결하는 고리가 되고, 조세 타협의 특성이 곧 국가가 자원과 관계 맺는 방식을 규정한다. 극단적으로 조세 없는 근대국가 형성의 사례가 아랍 산유국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같이 조세보다 지대에 의존하는 지대 국가(rent state)는 국가가 자원의 독점적 이용과 관리에 의존해 성립한 경우라 할 수 있다(손낙구, 2022: 68). 한국의 경우 재정이 취약한 발전국가로 국가가 직접 투기적 도시화의 행위자로 역할하며 도시 개발의 재원을 형성했다. 한국의 1기 신도시는 재정이 부족한 발전국가가 재정 적자를 보지 않고서도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한 사례인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해보면 이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땅장사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조세 타협의 결과 또는 재정사회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국가의 특성은 자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태도를 규정한다.

그렇다면 재정의 문제를 피해 ‘국가’를 소환하는 논의가 가능할까? 국가와 시장, 커먼즈가 병렬적이라는 이해나, 커먼즈가 국가를 재전유해야 한다는 논의, 국가와 협력하여 커먼즈를 생산해야 한다는 논의 모두 경제와 사회를 국가가 연결하는 고리인 재정의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나는 한국의 재정 구조가 형성한 조건에 대한 고찰이 한국에서 전개되는 커먼즈 논의에 보다 구체적인 쟁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즉, 커먼즈와 관련되어 소환되는 온갖 국가를 ‘재정’이라는 정치적이면서 물질적인 타협의 결과를 중심으로 이해한다면, 커먼즈와 국가라는 주제가 더 선명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는 국가를 커먼즈로서 이해하는 시도와도 이어질 수 있다. 국가는 커먼즈인가?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꾼다면 어떤가. 세금은 커먼즈인가?

여기서 한발 더. 한국 재정 경로에 영향을 미친 특수한 제도인 각종 기금, 그 중 주택도시기금을 사례로 생각해보자. 총 200조원 규모에 이르는 주택도시기금의 자산은 약 83조원은 청약저축으로부터, 78조원은 국민주택채권으로부터 형성되었다(2020년 기준). 모두 국민들이 모은 돈이다. 이 돈으로 국가에 의한 정책금융 차원에서 전세자금과 구입자금에 대한 용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들의 저축을 통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역시 재정이 취약한 한국이 선택한 특수한 전략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국민주택기금은 커먼즈일까? 국민주택기금의 커먼닝은 인식론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주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

2)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접근과 그 관계: 비판이론-정치철학적 접근과 경험과학-재정사회학적 접근 (현우식)

이태영의 글은 기존 커먼즈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를 소환하지만 각각의 논의에서 다루지는 국가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며 국가를 이해하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역사가 공공재정에 그 기록을 남긴다는 슈페터(Schumpeter, 1991)의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재정 혹은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국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접근은 근대 국가에 대한 경제주의적 서사와 국가주의적 서사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사회관계를 형성하는 고유의 역사적 맥락을 환기하는 효과가 있다(김미경, 2019: 101~102). 이로 인해 우리는 국가의 성격과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를 선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도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초래하면서 동시에 커먼즈 구축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 여겨지는(황진태, 2023) 국가라는 대상의 작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존 논의는 국가에 대한 정치철학적 입장에 근거하여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한다. 예컨대, 저자가 언급한 마이클 하트, 안토니오 네그리, 맛시모 데 안젤리스는 네오오페라이스모(neo-operaismo)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동시대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논자들이다. 네오오페라이스모 현대자본주의론의 핵심은 오늘날 자본의 생산과 축적이 커먼즈 혹은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다(윤영광, 2022). 이들은 각각 커먼즈를 둘러싼 투쟁이 현대자본주의 내부(네그리·하트, 2001) 혹은 외부(안젤리스, 2019)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안적인 생산양식, 나아가 대안적인 국가의 구축을 모색한다. 그것이 어떤 사회구성체(social formation)의 형태를 띠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지만, 주권(sovereignty)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대 국가와는 다른 형태이며, 그 역사적 경로는 다중-노동자들의 투쟁에 열려 있다.

이 입장이 최근 커먼즈 연구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이유는 2010년대를 거치며 급진화된 커먼즈 학술장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커먼즈를 주어진 질서에 대한 비판이자 구체적인 현실에 개입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장훈교, 2022).<sup>4)</sup> 이들은 현실의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적 소유제를 근간으로 한 근대 자본주의 국가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입장은 사회변화의 원동력을 계급투쟁 혹은 다중-노동자들의 역량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입지점(standpoint)이 명확한 것에 비해 그러한 투쟁의 입지점이 불명확하다. 이는 현대자본주의에서 커먼즈를 바탕으로 한 투쟁이 언제나 제도적으로 매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박서현, 2023). 이로 인해 주장의 급진성과 달리 제도적 개입을 비판하거나, 특정 ‘현장’에서 새로운 상상력을 찾는 데 제한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

이 입장의 문제는 정치의 영역을 구분되는 제도정치의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s)의 영역에 특권적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입장이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를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이태영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론-정치철학적 논의와 경험과학-재정사회학적 논의를 대립시키고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의 문제들(problematic)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제들이 구체적인 사회-정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4) 여기에는 90년대 이후 한국 비판사상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전개에 있어서 네그리와 하트의 오페라이스모 마르크스주의가 하나의 조류로 자리잡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한계가 기존의 문제들을 적용한 경험 연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문제들 자체의 이론적 모순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글의 말미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커머닝”을 말할 때 이태영의 입장은 그것이 커머닝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 “모두 국민들이 모은 돈”이라는 점에서 - 비판적으로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의 근거는 전체로서의 사회가 정치제체, 경제제체, 사회제체로 구분되어 있다는 재정사회학적 분석틀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는 생략된 정치철학적 논점이 있을 것이다. 비판이론-정치철학적 논의와 경험과학-재정사회학적 논의는 언제나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나는 이 문제를 기존 커먼즈 국가론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통해, 그리고 이태영이 제시한 재정사회학이라는 대안이 갖는 모호성과 불충분함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제기하고자 했다.

### 3) 숫자의 유통: 교환가능한 사례 찾기 (김지혜)

이태영의 글은 커먼즈 논의의 고전이 된 하딘의 글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써 하딘의 관심이 시장화와 민영화의 근거로만 사용된 까닭을 추적하면서 시작한다. 나 역시 하딘의 논의를 너무 쉽게 그 논의를 시장 개입 옹호 모델로 축소 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태영의 논의는 그 의미를 적절히 해석할뿐더러, 지식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변용되어 해석되는지 살펴보는 점에서 반가운 글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태영은 또 다른 고전인 오스트롬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하딘과 오스트롬이라는 두 학자의 관점을 역사 밖에서 외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자원관리 방식에 대한 역사적 변화 속에서 해석하는 방식도 매우 유용하게 보인다. 그런데 이태영은 이러한 초반부 설명과 달리(그래서 사실 왜 앞부분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지 의아스러웠기는 하지만 나름대로의 해석을 덧붙여 이해해 보자면), 즉 국가(와 시장)을 커먼즈 밖의 것으로 다루는 논의와 달리 국가 그 자체와 커먼즈의 관계를 다루는 논의가 또 하나 있음을 밝히면서 국가-커먼즈 관계 논의를 개진한다.

여기에서 이태영은 국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주제’로서의 국가(통치)를 다루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체화한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현우식의 비판적 해석과 달리 바로 이러한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반갑다. 커먼즈 논의는 그 개념의 출발이 소박했던 것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함의하는 것으로 발전했고,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만이 커먼즈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입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태영의 재정사회학적 방식을 나의 식으로 해석하자면 ‘숫자의 유통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국가는 일종의 숫자 유통 과정의 노드로서 파악되는 것 같다. 국가를 숫자의 유통 노드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접근인데, 바로 그 숫자의 흐름 속에 시장과 국가, 국민, 심지어 커먼즈도 비로소 ‘교환가능한’ 소통 도구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게오르그 짐멜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이것이 매우 유용하고 현실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 숫자는 스케일을 넘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들을 틈새없이 이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단히 모호한 지점이 생기고, 오히려 이태영에게 듣고 싶었던 논의가 질문의 형태로 남겨져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숫자를, 숫자의 유통을, 혹은 숫자 유통의 노드를 커먼즈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답은 열려있어 보인다. 그러나 현우식이 제기한 것보다 조금 더 비판적으로 덧붙이자면, 그러한 논의는 ‘국민들이 모은 돈(숫자)’이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다소 잊혀진 전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다시 말해서 재정과 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도덕적 고취 그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재정과 기금을 다시금 정치력이 필요한 협상 테이블에 놓기 위해서, 커먼즈는 다소간 여전히 추상적인 당위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운이 나쁘면, 공공성(어

편 의미에서는 공리주의적 공공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치)을 확보하라는 요구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질문하는 것은 도대체 왜 우리는 커먼즈라는 개념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 4) 커먼즈와 연결-해체하기: 신도시 개발-기금-사회적 부동산 (최희진)

이태영은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기존의 커먼즈 논의에 부재한 국가의 정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한다. 커먼즈 논의에서는 ‘국가를 커먼즈의 대상’으로 보거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나, 정작 ‘국가’에 대한 이해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재정’을 경유하여 커먼즈 논의에 구체적인 논쟁을 벌인다.

우선 이태영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정사회학’이라는 학문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간단히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정치-경제-사회라는 체제 사이에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한다. 다만 나는 그의 논의를 이론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재정사회학’의 관점을 몇 번이고 되짚어보나, 어느 지점에서 계속 막힌다.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부체제가 왜 하부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예시로 설명한 부분에서 ‘공공서비스’와 ‘충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나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정부-가계 등의 상호작용에서 조세-화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여서 ‘재정사회학’의 하부체제의 원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이태영에게 요청한다(짧은 지면에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담일뿐더러 ‘사회학’ 전공자라면 능히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해한다). 덧붙여, 이해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여타 자료를 찾아보다, 재정사회학 관점에서 한국의 국가에 대한 분석적 서사를 시도한 김미경의 연구(2019)를 참조한다. 김미경(2019)에 따르면, 재정사회학의 논의는 “국가가 재정을 어떤 유형의 재원에 의존하는가의 문제가 국가 형성, 국가-사회관계, 정치적 대표체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이태영의 논의는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국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정’과 그 관계를 살피는 분석적 서사를 경유하여 커먼즈 연구에 쟁점을 구체화한다.

이태영은 한국의 1기 신도시 개발 사례를 통해 국가가 열악한 재정상태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실시할 수 있었던 특이성을 강조한다. 또한 그는 국가가 자연자원인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땅장사의 주체”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꼬집는다. 한편 나는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가져와서 “땅장사”를 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나는 1기 신도시 계획과 개발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대규모 토지와 막대한 재원을 확보한 방식을 살피며 “국가는 커먼즈인가?” 혹은 “세금은 커먼즈인가?”라는 이태영의 질문을 다시 본다.

1기 신도시 계획(1989~1996년)은 서울에서 20~25km 떨어진 5개 지역(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택지개발의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의 프로젝트다. 당시 정부는 유휴자본을 실물 경제 확충에 기여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주택 200만호 공급 계획의 조기 달성이라는 직접적인 동기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다(황희연, 2001). 이때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데, 한국토지공사(건설교통부 산하)를 통해 국가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한다. 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용지취득의 방식은 전면 매수 방식으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토지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다(김광식, 1996). 1기 신도시 건설의 총 사업비는 약 10조 4,700억 원에 달한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분당 신도시(계획인구: 39만명)의 사업비는 4조 1,642억 원(용지비 1조 2,565억 원, 개발비 1조 3,315억 원, 간선시설지원비 1조 5,762억 원)이다(한국토지공사, 1997). 이런 막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세를 통해 얻은 정부 수입과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급성장한 건설자본, 정부의 택지매입 선투자, 주택상환채 도입과 주택선분양 등이다(황희연, 2001). 다만 황희연(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주택

상환사채를 통해 건설업체들이 자신의 자본을 별로 들이지 않고 많은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였으며, 주택분양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들이 분양가격을 인상시켜 상당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게다가 개발대상지역 주변의 토지를 선점한 토지 소유자들에게도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다주었다.

이처럼 정부는 신도시 계획과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기금을 활용한다. 신도시 계획과 개발에 대한 평가와 성찰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며, 관 주도 공영개발 방식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 소규모 택지 개발 등 여러 개발 모델을 낳는다. 30여 년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오늘날 재건축이라는 또 다른 쟁점을 가진다. 최근에 정부는 재정비 지원을 위하여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발표하는데, 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은행 및 금융기관 등의 출자 및 투자 등의 방식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렇다면, 재정사회학의 시각에서 신도시 계획과 개발 방식을 통해 국가-사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어떨까. 그럼에도 이런 논의에 ‘커먼즈’를 덧붙이면, ‘조세’, ‘저축’, ‘기금’이라는 ‘재정’이 이런 개발 방식에 쓰이는 게 적합한가. 신도시 건설이라는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잠시 벗어나,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사회적 부동산’을 살핀 연구를 참조한다. 최명식의 연구(2022)에서는 국가나 개인이 아닌 제3의 소유방식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데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형성을 중요한 지점이라 강조한다. 이렇게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공유자산을 논의할 때에는 국가와 시장을 벗어나 제3의 공동체나 어떤 조직 형태를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 또한 소규모 단위의 공동체가 협상하는 과정과 달리,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재정비하는 과정에서의 ‘복잡성’을 어떻게 커먼즈로 포착할 수 있을까. 사실상 국가와 재정, 그리고 커먼즈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인 사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서는 체제전환으로써 ‘커먼즈’를 논의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지 않나.

#### 5) 재정사회학에 커먼즈 덧붙이기?: 공동(common)과 공공(Public)의 관계 설정에 남겨진 문제들 (홍지은)

이태영의 글은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에 있어서 ‘재정’을 일련의 연결고리로 소환하고자 한다.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는 각각의 정치철학적인 입장에 따라 넘어서거나, 재전유하거나, 협력하는 대상이 된다. 여기서 이태영은 각각의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가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서, 국가가 그 자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재정(public finance)’을 국가를 이해하는 구체적인 주제로 제안한다. 그의 논의는 ‘재정’을 끌어오는 것이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를 이해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기대하게 한다.

전반적인 글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커먼즈 논의의 맥락에서 커먼즈가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 설명하고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를 바라보는 각기 다른 입장을 설명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한다. 그다음에는 국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방안으로 재정사회학을 제안하고, 재정사회학적 관점을 경유하면서 이 논의를 커먼즈 논의와 연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그런데 이 같은 글의 전반적인 구성에서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 재정사회학과 커먼즈의 관계 등은 여전히 모호한 자리에 남겨져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계를 가지게 됐다는 이태영의 문제제기가 이 글에서도 반복되고 있기도 하며, 구체적으로 ‘재정’의 문제가 커먼즈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여전히 모호한 질문으로만 남겨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 모호하다고 느껴진 것은 ‘재정사회학’의 관점과 커먼즈 논의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지점이다. 재정이 일련의 경로로서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간의 연

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충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 ‘커먼즈’와 ‘재정’의 관계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해야 할까? ‘재정’이 국가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이 논의를 따라간 지점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의 태도 이외에 커먼즈와의 어떤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나아가 국가 그 자체를 커먼즈로서 이해하려는 시도뿐만 아니라 세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커먼즈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먼즈와 공공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자 하는지에 관한 물음에도 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채로 ‘재정’에 관한 논의를 끌어들이게 되면 여전히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제기된다. ‘OO은 커먼즈인가’하는 질문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겠지만, 왜 커먼즈로 다루고자 하는지, 그리고 커먼즈/공동(common)과 공공(Public)의 관계는 어떻게 다를지에 관한 명확한 논의 없이 이어지는 질문은 여전히 국가를 모호한 채로 남겨둔다. 이는 커먼즈 논의에 있어 국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주체를 찾으려는 시도를 보다 세밀하게 채워가기 위해 남겨진 공백이라고 생각한다.

#### 6) 첫 번째 응답 (다시 이태영)

동료들의 질문에 부족하게나마 응답을 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재정사회학이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나는 나의 실패한 시도에 대한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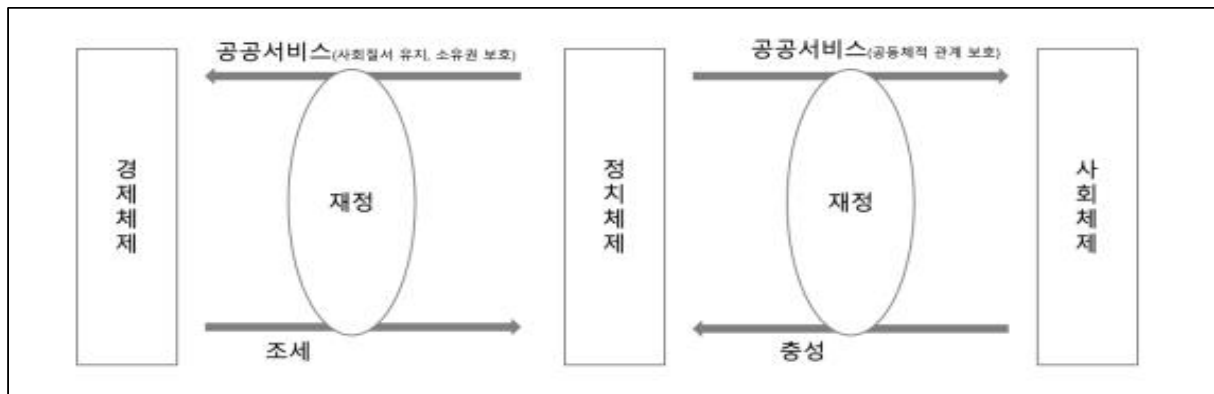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부체제가 왜 하부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예시로 설명한 부분에서 ‘공공서비스’와 ‘충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필자는 경제주체로서 기업-정부-가계 등의 상호작용에서 조세-화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익숙하여서 ‘재정사회학’의 하부체제의 원리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이태영에게 요청한다.” (최희진)

우선 짧은 분량을 핑계 삼기엔 재정사회학에 대한 나의 이해가 미천한 수준이라는 점을 먼저 고백해야겠다. 나는 기존의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국가를 좀 더 정교하게 논의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사회학적인 접근을 제안했다. 결론적으로는 재정사회학적인 접근이 어떻게 국가에 대한 논의를, 특히 커먼즈적인 관점에서 돕는지에 대해서는 설득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재정사회학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커먼즈 논의에서 국가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대로 남겨두려고 한다. 하지만 너무 대책없이 ‘재정사회학’을 운운해버렸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감으로 재정사회학 일반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에 도전해보려 한다.

재정사회학의 문제의식은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로부터 시작됐다. 슈페터(1918)는 국가와 사회의 모든 역사가 공공재정에 그 기록을 남기며, 그렇게 때문에 재정은 사회를 연구하는 최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김도균, 2018: 15). 반세기 뒤에 오코너(James O’connor)는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시각서의 인과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오코너(1973)는 자본주의 국가의 모순적인 두 가지 기능, 즉 자본축적과 정치적 정당화라는 기능이 어떻게 재정 위기를 야기하는지 분석했다. 국가는 사회적 투자와 사회적 지출을 통해 자본의 이윤 추구 비용을 감소 시켜 자본축적을 도울 뿐 아니라 자본의 이윤 추구가 야기하는 외부 효과를 완화해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자본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확장적 재정력에 저항하고, 국가는 결국 지출과 수입의 불균형 상태에 놓인다.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위기다. 국가는 이 상황을 세 가지 해결책, 공기업과 부채, 증세를 통해 극복하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 위기는 타개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코너의 분석이다. 오코너와 슈페터의 차이점은 오코너는

재정위기의 본질을 경제적으로 이해한 반면, 슈페터는 재정위기의 본질에 정치적인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김미경, 2018).

진노 나오히코(2000)는 슈페터와 오코너의 논의를 이어 받아 재정사회학을 재정과 하부체제 개념으로 설명했다. 나오히코에 의하면 재정은 어디까지나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부체제의 연결고리이다. 그는 사회의 하부체제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사회체제를 구분하고, 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재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체제는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경제체제로부터 조달한 화폐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소유권을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도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공급한다. 사회체제에 대해서는 공동체적인 여러 관계를 보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재정이라는 경로를 통해 공급하면서 ‘충성’을 획득한다(진노 나오히코, 2000: 20~21).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재정과 하부체제

이런 설명들을 경유하여 내 생각을 정리해보면, 재정사회학의 문제의식은 ‘숫자의 유통’(김지혜가 지적한)을 특수한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대국가의 본질 중 하나인 조세협상(“대표 없이 과세 없다”)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자본축적(경제체제의 기능)과 정당성(사회체제의 기능)이라는 모순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작동방식을 재정을 통해 규명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 유지를 책임지는 동시에 조세로 조달되는 자원에 의존하는 근대 국가에서 조세를 둘러싼 갈등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 재협상되며,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현된다(손낙구, 2022: 20~21).

한국의 정치체제는 취약한 정당성 구조 때문에 충성을 동원하기도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려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은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었을까? 재정사회학의 관점을 경유하면,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된다. 일례로 한국의 경우 적자로 재정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신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공급했다. 대규모 도시 이주 속에서 성립한 한국의 도시개발 전략에 대한 규명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자산기반 복지, 저생산성 부문의 고용을 보장한 일본의 토건국가, 그리고 한국의 개발공사(개발부문 공기업)를 경유한 도시개발 같은 발전 방식은 한국에서 형성된 특수한 재정전략 중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를 하나의 명사로 이해하는 것은 설명의 영역을 매우 편협하게 제한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명사로서 근대의 자본주의 국가가 자본축적과 정당성 동원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의 전략과 작동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 나는 커먼즈 논의에서 소환되는 국가가 하나의 명사에 가깝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고,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 와중에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를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슈페터와 오코너의 문제의식을 빌려쓰고 싶었다.

둘째, 나의 문제의식이 사실상 커먼즈와 퍼블릭을 혼동하는 것 아닌지 하는 질문들이다.

“재정이 일련의 경로로서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충성’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 ‘커먼즈’와 ‘재정’의 관계는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해야 할까? ‘재정’이 국가와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데에 도움을 주지만, 이 논의를 따라간 지점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국가의 태도 이외에 커먼즈와의 어떤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 (홍지은)

“ ‘국민들이 모은 돈(숫자)’이라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다소 잊혀진 전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는, 다시 말해서 재정과 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도덕적 고취 그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재정과 기금을 다시금 정치력이 필요한 협상 테이블에 놓기 위해서, 커먼즈는 다소간 여전히 추상적인 당위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운이 나쁘면, 공공성(어떤 의미에서는 공리주의적 공공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가치)을 확보하라는 요구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지혜)

이건 재정사회학을 무리해서 활용하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나는 이 질문들 덕분에 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여전히 퍼블릭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커먼즈 논의, 특히 그 중 커먼즈 정치론을 강조하는 어떤 접근은 사실상 퍼블릭을 대체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편이고, 그렇다면 좀 더 퍼블릭에 대한 논의를 정교화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모은 돈(숫자)’라는 잊혀진 전제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 재정과 기금의 공공성에 대한 자각을 독려하는 것은 적어도 국가라는 개념을 경유한다면 우회할 수 없는 접근이 아닐까.

마지막, 커먼즈 정치론의 문제는 이론의 문제인가, 경험적 연구의 부재의 문제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론의 문제라면 경합할 대상이고, 경험적 연구의 부재라면 보완의 여지가 있는 접근이 된다.

“이 입장을 문제는 정치의 영역을 구분되는 제도정치의 영역과 명확히 구분되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s)의 영역에 특권적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입장이 커먼즈와 국가의 관계를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으로 표상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 이 점에서 이태영의 입장은 다소 모호해 보인다. 국가에 대한 비판이론-정치철학적 논의와 경험과학-재정사회학적 논의를 대립시키고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는 기존의 문제들(problematic)을 이론적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기존의 문제들이 구체적인 사회-정치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편이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의 한계가 기존의 문제들을 적용한 경험 연구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지 문제들 자체의 이론적 모순에 의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현우식)

이 질문에 대한 현재 나의 입장은 커먼즈 정치론의 문제는 인식론적인 문제(이론의 문제)라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이것이 현재적인(일시적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부연하는 것은 ‘이론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내 입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이론적 모순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 4. ‘모두의 것’으로 향하는 커먼즈 정치? : 홍지은으로부터

- 1) ‘모두의 것’으로 향하는 커먼즈 정치?

이 글은 커먼즈 연구의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커먼즈 정치론’(정영신, 2016; 2020)이 지닌 쟁점과 한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커먼즈 정치론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특정한 방식에 주목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커먼즈 정치론은 학술연구와 사회적 운동을 결합하는 이론적, 운동적 맥락의 수용을 전제하여 전개되며, 이 같은 전제는 커먼즈 정치론이 이해하는 ‘정치’에 관한 이해와도 연결된다.

학계에서 커먼즈 논의가 화두로 등장한 배경에는 하딘이 1968년 발표한 논문인 『공유지의 비극』이 있다. 하딘은 인구 증가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을 부여하거나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행사하여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스트롬은 공동체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커먼즈를 관리하고 이용해 온 여러 사례를 분석하면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에 관한 논의를 반박했다. 하딘의 테제와 달리 사유화나 국가의 통제 없이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자치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오스트롬은 감소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동자원(common pool resources, CPRs)’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정한 이용을 위한 제도 원리를 도출하는 데 주요한 관심을 두고, 성공적 자원관리를 위한 디자인 원리를 도출했다.

정영신(2020)은 두 갈래로 나뉜 커먼즈 진영의 분단을 진단하면서, 한 편에 앞서 살펴본 오스트롬의 제도주의적 커먼즈 규정이 있다면 다른 한 편에 커먼즈의 사회운동이 서로 분리되어 자리한다고 본다. 커먼즈의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커먼즈론을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 패러다임으로 수용하면서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 또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환’하는 전략 내지는 운동을 구축해왔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장 논리의 작동이 초래한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파괴적 결과는 국내외에서 커먼즈 운동이 부상한 주요한 배경으로 지목된다(Caffentzis, 2016; 윤여일·최현, 2023: 51) 사회운동 진영에서의 커먼즈 논의는 ‘운동의 종합’을 이뤄내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다뤄지기도 한다. 커먼즈의 사회운동이 각 운동을 연결하는 연대와 동맹을 창출하는 전략적인 “운동의 운동(movement of movements)”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회구조의 복잡성에 대항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전략의 차원에서 작동한다(장훈교, 2022: 37).

이때 ‘커먼즈 정치론’은 커먼즈 진영의 두 갈래의 분리에 대응하여 그 관계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로 제시된다(정영신, 2020: 239). 커먼즈 정치론은 오스트롬 논의에 기반한 제도주의적 접근과의 대결을 주요한 과제로 삼으며 이 접근과 연구의 한계가 커먼즈 연구 진영이 분단된 직접적인 원천이라고 지적한다(정영신, 2020: 245). 이 분석에서 제도주의적인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로 지목하는 주요 지점은 커먼즈가 갖는 보편적 권리의 차원을 누락한다는 점이다.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경우 커먼즈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거시적인 규범이나 보편적 원리의 존재를 함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그에 대한 사회집단들의 대응 속에서 새로운 커먼즈가 생성될 가능성과 그 효과에 대한 질문이 이론적·방법론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정영신, 2020: 245). 커먼즈 정치론은 이에 대응하여 거시적인 규범이나 보편적 원리의 존재, 현대사회의 구조변동과 그에 대한 사회집단들의 대응이라는 문제를 보다 중심으로 끌어오려고 시도한다.

커먼즈 정치론의 접근은 이 문제가 커먼즈의 본질적인 성격과 커먼즈의 변동의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본다. 먼저 본질적인 성격의 측면에서 커먼즈는 일정한 ‘경계’를 지닌 공동체의 자원인 ‘우리의 것’과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성격인 ‘모두의 것’이라는 두 차원을 동시에 지닌 것으로 제시된다(정영신, 2020: 245-247). 다시 말해 커먼즈는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이라는 이중적 규정이 통합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존재해왔다. 그러나 근대화의 과정에서 ‘모두의 것’으로서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는 부정되고 소멸했으며, ‘우리의 것’은 공동체의 대응 역량에 따라 사적소유제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제도화하거나 해체됐다(정영신, 2020: 248-249). 이와 관련하여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갖는 한계는 커먼즈가 지닌 보편적 차원인 ‘모두의 것’에 관한 측면을 다루지 못하

고, '우리의 것'이 제한적으로만 존속되는 형태만을 관찰했다는 것이다(정영신, 2020: 251).

다음으로 커먼즈의 변동과 관련해서, 커먼즈를 역사적·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역동적인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를 제시한다(정영신, 2020: 250-251). 이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커먼즈 정치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자치적인 '자원관리' 문제를 넘어 생활양식, 생산양식, 교환양식 등 구조적 문제의 변동을 다룰 때 '모두의 것'이라는 보편적 권리의 차원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 열린다. 둘째, 커먼즈는 자원 그 자체에 내재된 객관적 특성으로 볼 수 없으며 특정한 자원이나 공간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인식하고 생산·재생산하려는 실천, 즉 커먼즈의 실천을 통해서 구성된다. 이때 커먼즈의 실천은 "국가와 자본주의적 시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관계와 주체를 구성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정영신, 2020: 252).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특정한 공동체 내에서의 '자원관리' 문제에 주목하고 자원에 내재한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커먼즈를 이해했다면, 커먼즈 정치론은 커먼즈를 (재)생산하고 구성하려는 실천에 주목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이 같은 논의를 통해 커먼즈 정치론이 제기하는 문제는 커먼즈에 대한 보편적 권리, 즉 '모두의 것'의 차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논의에서 말하는 '정치'는 사적소유체제의 질서가 야기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비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적 권리를 마련하고, 경계를 보다 개방적으로 재설정하는 요구에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으로 제시된다(정영신, 2020: 252). 이는 커먼즈 보편적 권리의 차원이 누락될 경우, 특정한 공동체가 어떤 자원에 대한 특권적인 권리를 가지고 소유, 이용, 관리 등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을 경계하려는 시도에서 특히 그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커먼즈 정치론은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커먼즈 연구 진영이 분단된 직접적인 원천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면서도, 이 논의와 연구에서 몰두해 온 '우리의 것'에 관한 문제를 폐쇄성과 배타성에 따른 경계의 측면으로만 다룬다. 커먼즈의 보편적 차원에 관한 강조가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혹은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가면서,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관계에 관한 분석과 논의는 누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커먼즈 정치론(정영신, 2016; 2020)이 문제제기에서 지적했던 커먼즈 사회운동 진영의 문제, 즉 "집단 내부의 집합행동 가능성은 미리 전제"되어 있는 것처럼 다루는 그 한계를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커먼즈 정치론에서 공동체 자치에 관한 '우리의 것'이라는 차원이 주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관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한계를 가지게 된다.

정영신(2020: 254)은 커먼즈 정치론을 다루면서 제주 지역에서 나타난 해녀들과 스쿠버 다이버 간의 분쟁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 분쟁의 경우, 해녀들은 '우리의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한편 다이버들은 바다에 대한 개방적 접근권을 바탕으로 '모두의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사례에서 오스트롬이 제시한 '권리의 다발'논의를 통해 여러 권리의 공존과 조정을 제안할 수는 있지만, 제도주의적 접근은 자원관리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므로 결국 사적소유체제에 대한 '약한' 비판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사적소유체제의 질서가 야기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비판하고 보편적 권리로써 '모두의 것'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는 커먼즈 정치론이 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더욱 모호해 보인다. 왜냐하면 해녀들의 권리를 단순히 '우리의 것'을 구축하려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이야기로만 일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오스트롬의 제도주의적 분석이 갖는 일정한 한계, 예컨대 커먼즈를 특정한 물리적인 속성으로 고정하여 이해하거나 합리적인 개인 행위자를 설정하여 다루는 방식은 비판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특히 커먼즈가 안정적인 조건에서 작동하거나 견고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만, 이 같은 한계에 대한 대응으로 구축한 커먼즈 정치론이 자치를 구축하고 실현하는 공동체에 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행하는 제도주의 분석이 가진 장점까지 기각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 권리라는 거시적인 목표 달성을 통해 경계

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선부르게 통합하거나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오히려 불균형을 만든다고 본다. 커먼즈 정치론은 경계를 보다 개방적으로 재설정하는 요구(내지는 욕구)를 담아내면서 자치적인 협력과 규칙을 다루는 ‘우리의 것’은 그 경계가 갖는 폐쇄성을 해소해야만 하는 집합으로만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오스트롬의 제도주의적 접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다른 시도를 살펴보면, 예컨대 최현(2019)의 경우 오스트롬이 제시한 재화의 유형 분류와 그 분류 기준 그 자체를 기각하기 보다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새로운 범주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적 속성에 따라 공동자원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경합성과 독점정당성의 개념을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 그의 공동자원 정의는 제주도의 바다밭 관리 사례를 통해 설명되는데, 이 사례는 자원을 이용하는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실천과 행위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는 이를 통해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을 다룬다. 다만, 그의 논의는 ‘황금률(공정성과 인간의 생명 존중)’을 주요한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이처럼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가정된 규범적이고 윤리적 기준으로 커먼즈(공동자원)를 규정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에 커먼즈 구성의 조건이 이미 합의되거나 선행하는 것으로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다.

커먼즈 정치론에 비추어 도출해 볼 수 있는 커먼즈 논의의 난점은 서로 다른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진영에서 촉발된 간극과 긴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특히 사회운동과 결합을 시도하는 커먼즈 정치론이 보편적인 권리의 구축을 통해서 ‘우리-모두의 것’으로 통합된 차원을 구성하려고 시도하는 가운데 자치적인 ‘우리의 것’의 차원을 공동체의 배타적인 경계의 문제로 축소하여 다루는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공동체 내부의 집합행동의 가능성과 조건, 그리고 보편적 권리와 구조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러 관점과 논의 간에는 일정한 경계와 긴장이 존재한다. 이 글은 커먼즈 논의의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화의 감각을 어느 한 차원으로 선부르게 통합하려 시도할 때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에서 작동하는 커먼즈가 갖는 다층적인 측면이 가려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남긴다.

## 2) 발달한 경합의 장을 위하여 (최희진)

홍지은의 글은 커먼즈 정치론의 등장배경을 비롯하여 그 특성과 한계를 다룬다. 홍지은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커먼즈 정치론은 오스트롬 식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커먼즈와 사회운동 차원에서 본 커먼즈라는 양분된 논의에 대응하여 그 관계를 해명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그의 글은 정영신의 연구(2016; 2020)에서 다룬 커먼즈 정치론을 주요한 논의에 지표로 삼아 보편적인 권리라는 차원과 현대사회의 구조변동 속에서 새로운 커먼즈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덧붙여 커먼즈 정치론에서 반복하는 난점을 들춘다. 특히 그는 커먼즈 정치론이 보편적인 권리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데 공동체 경계 내외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선부르게’ 통합하거나 해소하려는 시도에 불편함을 꼬집는다. 보편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도가 자치적인 ‘우리의 것’이라는 차원에서 공동체의 배타성 내지 경계의 문제만 다룬다. 가령 앞서 홍지은의 언급한 바와 같이, 해녀 집단의 바다밭 관리에서 공동체의 협력과 자치 규약을 단지 ‘우리의 것’이라는 측면에서 해소해야 하는 집합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모두의 것’이라는 하이픈(-) 사이에 나타나는 겹치거나 쪼개진 애매한 지점이 있을 텐데, 이때 ‘정치’가 등장한다는 것일까. 어떻게 ‘모두의 것’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쟁투에서 ‘어떻게’를 정치로 말하면 되는 걸까? 커먼즈 정치론은 ‘정치’를 이해하고 논의하는 특정한 방식에 주목한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우리-모두의 것’으로 되찾기 위해선 ‘무엇을’ 포착할 수 있을까. 홍지은의 글은 커먼즈 정치론에서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관계에 대한 분석과 논의가 누락됐다고 지적한다. 어쩌면 ‘정치’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논

의도 생략하거나 중략한 게 아닐까. 내 생각엔 못 사회학자라면 모름지기 ‘정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인가. 그런데 나는 정치가 ‘무엇’을 하는지도 알고 싶다. 그리고 나의 질문은 공동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맞서 커먼즈 ‘정치론’이라고 부를 만큼 거시적인 사상체계를 만들고 싶은 걸까. 홍지은의 글에서는 커먼즈 정치론이 경계를 재설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담아낸다고 했는데, 이 ‘욕구’는 누구의 것이며, 왜 그런 ‘욕구’를 가져야 하는 걸까. 이런 졸렬한 질문밖에 난 할 수 없다.

사회학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정치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국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다(베버, 2017). 너무나 근본적인 이해의 욕구로 돌아가서, 나는 막스 베버가 말한 ‘정치’를 들춰본다. 사회학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정치’란 “권력에 관여하고자 하는 노력과 권력분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커먼즈 정치는 인간집단 내에서 혹은 인간집단을 둘러싸고 커먼즈를 유지하거나 되찾거나 더는 잃지 않기 위해서 권력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인가. 안타깝게도 이런 시각은 ‘평평한 지리학’의 시각에 불과하며 커먼즈의 정치는 영토를 차지하려는 각축전에만 함몰된다(안새롬 외, 2021). 안새롬 외(2021)는 영토적 발상에 반기를 든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가져와서 ‘대기 커먼즈 정치’를 통해 유동하고 비가시화된 수직 공간을 정치 공간이라 설명한다. 한편 나는 급진 민주주의를 기획하는 상탈 무페(2012)의 편에 들면서, 차이-특수한 것, 다양한 것, 이질적인 것-을 인정하는 논의를 덧붙이고 싶다. 따라서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의 새로운 접합에서의 커먼즈 정치를 다시 논의해보면 좋지 않을까! (짱긋) (발랄한 접합의 장으로 끝내며...)

### 3) ‘모두’로 가기 전에 ‘우리’를 재구성하는 커먼즈 정치 (이태영)

오스트롬 논의에 입각한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커먼즈 정치론’의 어떤 우려에는 충분히 동의가 된다. 홍지은이 정리한 바와 같이 제도주의적 자원관리 패러다임에 대해 커먼즈 정치론이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제도주의적 접근이 커먼즈의 보편적 권리의 차원을 누락한다는 것이다. 이는 커먼즈가 지닌 두 가지 차원, ‘우리의 것’이자 ‘모두의 것’으로서 존재하는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우리의 것’에 대한 것으로 좁혀 보편적 권리 차원에서의 논의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커먼즈 정치론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우려는 개발을 둘러싼 지역정치 공간에서 단적으로 증명된다. 개발과 반개발이 대립하는 공간에서 ‘우리’는 주로 개발을 옹호하는 이들의 개념이 된다. 한국의 여러 개발 이슈에서 개발을 반대하는 이들의 연대는 개발을 옹호하는 주민들과의 긴장에서 ‘외부세력’에 의한 개입으로 규정되어 왔다.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개발에 반대하는 ‘외부세력’ 간 긴장이라고 하는 구도는 설악산, 지리산, 밀양, 강정에서 일관적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경향은 소유권자들이 개발에 따른 지대이익의 형성을 기대하면서 성립하고, 이들 소유권자들이 ‘주민’으로서 위상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강화된다. 따라서 이는 정영신(2020)의 지적처럼 사적소유체제의 질서가 야기한 폐쇄성과 배타성의 문제와 관련 있고, ‘우리의 것’에 천착한 커먼즈 논의가 이러한 폐쇄성과 배타성을 비판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커먼즈 정치론이 ‘우리의 것’으로 축소된 제도주의적 논의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전개하는 논의의 한계도 분명 존재한다. 홍지은이 지적한대로 커먼즈 정치론은 ‘우리의 것’을 배타적인 경계의 문제로 축소하여 다루면서 제도주의적 접근이 자치적인 협력과 규칙에 대해 갖고 있는 진지한 탐구를 논의 전면에서 후퇴시킨다. 바다를 둘러싼 해녀와 다이버의 긴장을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 간의 경합으로 볼 때, 과연 해녀들의 권리를 ‘우리의 것’을 구축하려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이야기로만 일축하기 어렵다는 홍지은의 지적은 커먼즈 정치론의 한계를 잘 드러낸다. 홍지은은 커먼즈 정치론의 이러한 곤경이 커먼즈 논의에서 발생한 불화의 감각을 ‘선부르게’ 통합하거나 해소하려는 시도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도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나의 입장은 이처럼 커먼즈 정치론이 전제하고 있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커먼즈 정치론의 분석과 주장에는 비판적인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나의 주장은 커먼즈 정치론의 곤경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것’에 대한 논의에서 정치를 탈각시킴으로써 발생했다는 것이다. 커먼즈 정치론의 분석은 ‘우리의 것’에 대한 논의를 탈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모두의 것’에 대한 논의로 이를 확장시킴으로서 정치적 논의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로 읽힌다. 그러다보니 홍지은의 지적처럼 우리의 것을 둘러싼 논의에서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관계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의 긍정적 기여를 누락시키게 된다. 집합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관계에 대한 커먼즈 정치론의 무관심은 커먼즈 정치론의 주장을 규범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우리’와 ‘모두’를 결합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커먼즈 정치론에 대해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모두의 것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고민해볼 때, ‘우리의 것’을 둘러싼 정치를 우회하는 경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정치가 커먼즈 정치론이 전제하는 우려에 대응하는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커먼즈에 대한 법적이고 배타적인 소유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에 넣을 수 있는가 하는 정치. 도시의 세입자는 재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에 성원권을 가질 수 없는가 하는 정치. 제도적으로 마을 목장의 소유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온 마을의 또 다른 주민들은 마을목장의 성원권을 지닐 수 없는가 하는 정치. 이러한 정치를 ‘모두’의 정치라고 호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러한 정치는 ‘우리’를 재구성하는 정치라고 생각한다. ‘우리’와 ‘모두’의 구도가 선부른 통합을 시도해 곤경에 처했다면, 좀 더 ‘우리’에 머무르는 정치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모두’의 것으로서 커먼즈에 대한 논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최희진이 던진 제안처럼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사이의 새로운 접합에서의 커먼즈 정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특수한 것에는 정치적인 것이 없는가? 보편적인 것은 늘 정적인가? 나는 보편과 특수, 모두와 우리를 구분하여 어느 한 영역에 머무르는 정치는 본질적으로 탈정치적인 경로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오로지 그 접합에서 형성될 수 있고, 커먼즈 정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 4) ‘커먼즈 정치론’의 딜레마 (현우식)

이상의 논의는 정영신(2016; 2020)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커먼즈 정치론’이 갖는 난점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커먼즈 정치론이 커먼즈 개념에 구성적으로 내재하는 ‘모두의 것’과 ‘우리의 것’ 사이의 긴장을 이론화하고 있지만 ‘우리의 것’에 관한 문제를 폐쇄성과 배타성에 따른 경계의 측면으로 다루면서 양자의 긴장이 갖는 생산적 측면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홍지은은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기각하고 커먼즈 정치를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정치적 목적을 문제삼았으며, 최희진은 ‘모두’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정치의 가능성, 이태영은 ‘우리’의 구성을 둘러싼 정치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글의 전반적인 논지에 동의하지만, 커먼즈 정치론이 보편적 차원의 정치를 특권화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정치들을 누락시킨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으로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왜냐하면, 홍지은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바로 그런 정치를 특권화하는, 좀 더 중립적으로 말하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커먼즈 정치론의 정치적 목적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기존의 커먼즈 논의가 공동체에 의한 자원의 자치적 관리라는 관점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에서 누락되었던 보편적 차원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시도가 반드시 특정한 차원의 정치를 특권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이유는 없다는 반박이 가능하다.

그러나 커먼즈 정치론을 일종의 ‘막대 구부리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론적 실천으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그 한계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다. 나는 커먼즈 정치론이 그 정치적 목적과는 별개로 일종

의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커먼즈 정치론이 커먼즈 담론에서 학계와 사회운동 사이의 분단을 해소시키고자 하지만 기존 커먼즈 사회운동 진영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집단 내부의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미리 전제하는 한계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는 홍지은의 문제의식과도 공명한다. 즉, ‘커먼즈 정치의 딜레마’란 커먼즈 정치론이 해결하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로 커먼즈 정치론이 다시 회귀하는 문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어떤 문제이며,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에서 커먼즈를 둘러싼 문제에서 ‘우리의 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그것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실천과 연결되어 있어서만이 아니라 그 어떤 실천도 ‘모두’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불가피한 한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아마 커먼즈 정치론을 옹호하는 논자들도 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커먼즈 정치론의 주요 논지를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한 정치의 주체인 ‘우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여기서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선부르게 기각한 결과가 뼈아프게 돌아온다. 오스트롬의 기여는 ‘우리’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연대의 조건을 원리 수준에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커먼즈 정치론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론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봉쇄되어 있다.

결국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커먼즈 정치론에서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는 문제는 사적소유에 입각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실천을 규범적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오직 커머닝(communing)이라는 실천 속에서만, 그리고 여러 ‘현장’에서만 예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점에서 정영신(2020)조차 오스트롬의 자원관리 패러다임이 다시 재결합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커먼즈 정치론이 자원관리 패러다임의 타자로서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결합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커먼즈 사회운동 진영이 커먼즈 운동을 한정된 지역에서 공동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서 집합행동의 가능성을 미리 전제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면, 커먼즈 정치론은 이와 유사하게 한정된 지역과 공동체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어떤 정치적 주체를 미리 상정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닐까? 커먼즈 운동이 반자본주의와 같은 체제 수준의 정치와 연결될 수 있고, 또 연결되어야 한다는 희망 때문에 말이다.

오스트롬이 제기한 ‘자원 관리’라는 실천 개념이 너무 협소하다면, 커먼즈 정치론이 제시하는 ‘커머닝’ 개념은 너무 광범해서 문제이다. 최희진과 이태영이 제안한 대로 ‘모두’와 ‘우리’ 사이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정치의 동학을 보다 주의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커먼즈 정치론은 기존 커먼즈 담론의 패러다임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고 커먼즈 담론을 비판적, 급진적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는 그 효과 속에서, 다시 ‘우리’의 구성이라는 문제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오스트롬의 도움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물론 어디까지나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협력과 연대의 조건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실마리로서 말이다.

##### 5) 특수 의 욕망과 보편의 욕망의 이중주 (김지혜)

정영신의 글은 우리, 커먼센스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서로 비슷한 의문을 공유했지만 그 의문들이 똑같지만은 않다. 홍지은이 던진 질문들, 그리고 연이어 최희진과 이태영과 현우식이 던진 질문은 나의 질문과 얼마만큼 비슷하고 또 차이 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내가 정영신의 글 어느 부분에서 출발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나는 정영신이 ‘모두의 것’을 향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정영신의 논의 중 일부는 보편적 권리에 대한 옹호를 펼치지만 결론적으로 그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일면 모순되는 두 존재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다. 나는 그가 오스트롬을 비판하는 데에 사회운동을 비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종합으로서의 커먼즈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며 우리와 모두라는 두 개의

존재로 나뉜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지 고민했다고 생각한다(정영신, 2020). 그러한 의미에서 나는 현우식이 말하는 ‘모두’의 불가능성을 정영신 스스로가 매우 통렬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오히려 나는 정영신이 ‘모두’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과 ‘우리’를 위한다는 정치적 명분의 충돌 그 자체를 커먼즈 정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정치의 구체적 형태는 열려있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두’라는 것의 ‘우리성’에 대한 탐구와, ‘우리’라는 것의 ‘모두성’에 대한 탐구가 충돌할 때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용어로서 커먼즈 정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자면 정영신의 논의(2020)가 ‘우리의 것’을 폐쇄적인 공동체의 논의로 일축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 ‘모두의 것’을 모두 수용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는 경의선 공유지를 철수시킨 ‘공공성’은 편협하게 작동했다고 지적하며, 동시에 제주 바다에 대한 사용권의 경쟁은 ‘우리’의 논의 안에 들어있는 보편적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의미에서 최희진이 제기하는 무폐적 감각은 이미 정영신의 글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정영신이 커먼즈 정치의 범위를 협소하게 잡고 있다는 논의는 동의한다. 공동체 내부의 정치나, 공공성을 두고 벌이는 정치에 대해서는 커먼즈 정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물론 경의선 공유지가 공공성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은 지적되어야 하지만). 그가 커먼즈 정치를 외부와 내부의 충돌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이것은 어쩌면 집중하고 싶은 범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지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영신의 글에서 남는 의문은 무엇일까?

나는 그 보편과 특수성의 긴장을 다루려는 시도가 어쩌면 과장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보편과 특수는 지나치게 근대적인 스케일론을 답습하며, 보편과 특수성을 새로운 차원의 ‘우리 모두의 것’으로 격상시키려는 변증법적 해소는 지나치게 헤겔적이다. 나는 커먼즈에 어떤 정치가 함의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정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평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변증법적인 해소는 적당한 타협처럼 느껴진다. 어쩌면 이것이 홍지은이 이야기한 다층적인 측면일지도 모른다. 뫼비우스의 띠처럼 논의가 반복된다.

#### 6) 답변: ‘우리’와 ‘모두’의 사이/경계에서 (다시 홍지은)

커먼즈 연구와 활동에서 느꼈던 감각, 그중에서도 어떤 불화의 감각을 다루기 위해 이 글은 정영신(2016; 2020)의 ‘커먼즈 정치’에 관한 논의를 출발점으로 삼았다. 커먼즈로부터의 불화의 감각에서 시작한 ‘커먼즈’ 모임에서 논의하고 싶은 지점을 이 글이 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한권력’과 ‘생산양식’을 화두로 삼았던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2022)이 가졌던 기획과 ‘커먼즈 정치’에 관한 논의가 겹쳐지는 부분은 ‘보편적인’ 권리 내지는 현재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기획에 관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이 글은 정영신(2016; 2020)의 논의가 ‘우리의 것’과 ‘모두의 것’이라는 두 차원의 경계 내지는 긴장 속에서 커먼즈 정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결국 보편적인 권리의 차원으로 커먼즈 정치의 문제를 끌어올리려는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자치적인 것의 측면으로 제시된 ‘우리의 것’에 관한 논의가 제한적으로만 다뤄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글에 관한 서로 다른 4명의 응답은 김지혜가 짚고 있듯이, “서로 비슷한 의문을 공유했지만 그 의문들이 똑같지만은 않”았다.

“커먼즈 정치의 딜레마”(현우식)에 관한 논의는 커먼즈 정치 논의가 집단 내부의 집합행동 가능성을 미리 전제하고 특정한 정치적 주체를 미리 상정하는 문제로 회귀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는 커먼즈 정치론이 “‘우리의 것’에 대한 논의에서 탈각”(이태영)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도 연결된다. 특히 이태영은 커먼즈 정치에서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우리’의 수준에서 머무르면서 이

논의를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를 제기한다.

김지혜는 이 글을 세심하게 읽어내면서 커먼즈 정치론이 ‘보편’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며, 보편과 특수성의 긴장이라는 ‘범주’에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 커먼즈 정치에서 ‘우리의 것’을 폐쇄적인 공동체의 관점에서만 다룬다거나 ‘모두의 것’의 불가능성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수성의 욕망과 보편의 욕망의 이중주(김지혜)”에 관한 논의를 통해 근대적 범주에서 보편과 특수성의 긴장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변증법적 해소의 시도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김지혜의 논의는 커먼즈 정치를 통해 다루는 범주의 차이와 범주 그 자체의 설정이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커먼즈 정치의 ‘다른 차원’을 논의해볼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한다.

이처럼 정영신의 커먼즈 정치 논의가 제기하는 ‘우리 모두의 것’으로서 커먼즈에 관한 이해, 그리고 두 차원의 경계와 긴장에 관한 인식은 또 다른 커먼즈 정치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다. 이와 연결하여 다뤄진 릴레이 글에서 다뤄진 측면은 “‘우리-모두의 것’이라는 하이픈(-) 사이에 나타나는 겹치거나 쪼개진 애매한 지점(최희진)”, “‘모두’와 ‘우리’ 사이 혹은 ‘우리’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정치의 동학”(현우식),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지평(김지혜)”에 관한 측면이다. 이 같은 논의는 커먼즈 정치론이 다루는 ‘정치’가 ‘무엇’을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지, 범주와 입장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에 관한 보다 세밀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한다.

## 5. 커먼즈를 다시 보기 : 김지혜로부터

### 1) 커먼즈를 다시 보기: 언제나 부부인, 언제나 움직이는 이야기

#### (1) 문제 제기: ‘아리송한’ 개념

한국의 학술 장과 사회운동 장에서 ‘커먼즈’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자 할 때부터 난관에 부딪힌다. ‘과연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기 때문이다. 그때 커먼즈 연구자들은, 혹은 스스로를 ‘커머너’로 칭하는 사람들은 커먼즈를 표현할 적합한 번역어와 정의를 요구받는다. 이들은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의 논의-실천을 전개해 나가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금 ‘그래서 커먼즈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상황 속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어떤 때에는 커먼즈가 명확해 보여서 아주 손쉽게 포착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이 때 커먼즈는 사회를 바꿀 중요한 실천적 도구로서 여겨진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커먼즈가 도무지 무엇을 지시하는지 알기 어려워 커먼즈 그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든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역시 이 양가적인 흐름 속에 길 잃기를 반복해왔음을 고백하며, 아마 커먼즈에 애정을 느끼는 적지 않은 이가 이러한 괴로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가 우리 모임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커먼즈의 형용할 수 없음, 혹은 커먼즈 정의의 탐탁지 않음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우선 이 문제는 번역의 난점, 즉 번역어가 원어를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커먼즈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난해함이 있기 때문이다.<sup>5)</sup> 그 난해함을 해명하고, 커먼즈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 보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을까? 나는 우선 그러한 논의를 펼치기 위하여 커먼즈가 어떠한 ‘사이’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그 사이 양극단에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두 축을 근대성과 비근대성, 개별주의와 총체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커먼즈의 ‘관

5) 이는 커먼즈 활동가 데이비드 볼리어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커먼즈를 소개할 때에도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커먼즈가 무엇인지 설명해주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히는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볼리어, 2015).

찰자,’ 즉 근대성과 비근대성 사이에, 개별주의와 총체론 사이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진자(pendulum)로서의 관찰자가 있음을 제시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근대성과 비근대성을 하나의 분할선으로 절개하는 것은 온전치 않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근대라는 시대에 비근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닐 것이다. 또 비근대성을 탈근대성이나 전근대성과 등치하는 것도 비근대성이 지닌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sup>6)</sup> 그럼에도, ‘지금 여기’ 세계의 지배적인 질서와 규칙의 특성을 부정하기란 힘들다. 이 논의의 중요한 참조지점인 라투르는 근대성을 이질적인 것들의 집합체를 자연과 사회로 분할하고, 그 둘을 순수한 것으로 정화하는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라투르, 2009). 그러나 근대성에 대한 해명과 근대성에 대한 가치 판단은 사회학과 인류학이라는 분과학문의 근간에 있어왔다는 점에서, 결코 라투르의 해석이 근대성에 대한 유일한 해석은 아니다. 가령 파슨스(1999)는 근대성을 기능 분화로 설명하는 반면 인류학자 폴 코너턴(2009)은 공간 기억과 관련된 ‘문화적 기억 상실’을 그것으로 설명한다. 폴 코너턴과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인류학자 팀 잉골드(2024) 역시 근대성을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의 논의를 짧게 설명하자면 그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형성된 선(line)이 더 이상 움직임을 따라가지 않고 물화되어 분리된 점(point)으로, 그리하여 선이 더 이상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점들이 연결된 직선으로 지각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근대성을 정의하지만 관통하는 공통점이 있다. 요컨대 근대에는 이전에 분화되지 않은 영역들이 분화되고 구체화된다는 점이다. 이 근대성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이 글에서 나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커먼즈가 이러한 구체화의 논리가 적용되는 근대와 그러한 구체를 횡단하는 비근대, 그리고 개별과 총체의 문제에 있어서 이쪽과 저쪽의 기묘한 통로, 혹은 사이(in-between) 지대로서 의미화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 (2) 커먼즈의 이야기성

“신화는 사회적 질서와 세계라는 개념을 정당화하고, 무언가를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통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를 이러한 현재의 과거에 비추어 상상해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레비-스트로스, 2018: 101).”

다시 돌아가서 커먼즈는 왜 아리송한가? 우선 커먼즈 논의가 이야기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커먼즈라는 개념을 숙의하고자 한다. 먼저 네 가지 널리 통용되는 커먼즈 이야기를 간단하게 서술하고 커먼즈가 이야기를 떠날 수 없다는 점이 왜 중요한지 서술하도록 하겠다. 우선 커먼즈는 우화로부터 출발하는데, 이 우화는 생태학자 하딘이 설계한 ‘비극’으로 근대적 합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활용된다(Hardin, 1968).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근대성을 흔들지 않을 만큼 ‘작은’ 사례들로 가득하다. 오스트롬과 그의 동료들이 주로 그러한 이야기를 생성하였다(오스트롬, 2010). 세 번째 이야기는 ‘잊혀진 역사’에 관한 것이다. 영국의 대헌장이나 식민지 경험과 관련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비서구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체제로서 이해된다(라인보우, 2012). 네 번째 이야기는 미래를 산출해 내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세 번째 이야기와 주로 함께 나오는데, 역사가 된 커먼즈는 다시 한번 현재로 투사되어 현재 상황의 판단 근거가 된다.<sup>7)</sup>

6) 이승원(2020)은 커먼즈 운동을 탈근대적 실천이라고 규정된 바 있는데, 여러 논의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탈근대는 근대성의 극단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는 커먼즈 운동을 탈근대적 실천이라고 간주하지 않는다.

7) 이 미래적인 상상은 여러 방향으로 가능한데, 홍덕화(2019; 2022), 백영경(2017), 이광석(2020), 이승원

여기에서 커먼즈는 서로 다른 이야기들 속에 있고, 그 이야기들이 없다면 커먼즈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커먼즈는 때로는 무주지로서, 때로는 공동체가 관리하는 자원으로, 혹은 공동으로 만드는 행위의 산물로서 호명된다. 이때 커먼즈가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해지는 이유는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레비-스트로스는 일찍이 신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신화가 과거를 설명하고, 현재를 합리화하며, 미래를 이러한 과거에 비추어 상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위의 인용; 레비-스트로스, 2018). 이에 덧붙여 그는 ‘우리 문명’에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사라고 설명한다. 다만 신화는 여러 개가 있지만 역사는 단 하나의 역사가 있다고 기꺼이 믿는 믿음 속에서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 점에서 레비-스트로스는 역사와 신화를 대칭적으로 바라보았는데, 이 대칭성은 신화를 허구적인 것으로, 역사를 실재적인 것으로 두는 비대칭성에 대한 반기이다. 사고 구조 안에서 신화와 역사는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그것은 산발적이고 무차별적이며 혼란스러운 노이즈 속에서 질서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먼즈는 신화(역사)라는 이야기로서 기능한다. 이때의 역사는 정말로 과거에 그렇게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현재적인 발명으로서 역사가 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커먼즈가 담론 속에 기입되는 까닭은 우리의 현재가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커먼즈가 있었다는 사실 진술은 곧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능한 커먼즈를 상상하게 만들고, 우리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가치 진술이기도 하다.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커먼즈는 바로 그렇게 발명되고 그 속에서 미래를 창출할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듯 커먼즈는 어느 한 곳에 잘 정립되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움직임은 과거로 향하는 움직임과 미래로 향하는 양방향성이 모두 존재한다. 커먼즈는 시간의 축 양쪽으로 발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 편에서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커먼즈가 계속 발굴되고, 한 편에서는 미래적인 커먼즈가 상상된다.

물화된 커먼즈가 무기력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물화된 커먼즈는 시간성이 없으며 고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화폐처럼) 어느 곳에서나 통용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물화된 커먼즈는 움직임이 지워지고, 더 이상 이야기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의미를 상실한다. 여기에서 이야기는 다른 말로 서사이고, 맥락이며, 상황이다. 커먼즈가 난해한 이유는 우리가 서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동의, 공동에 의한, 공동을 위한’ 무언가를 논의할 때 그 ‘공동’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커먼즈가 보편 언어로 쓰일 때의 공허함은 이러한 위치성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 이야기를 중첩시켜 이 모든 것이 커먼즈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개념은 이미 복수의 관점들이 섞여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가, 유물론자가, 공화주의자가 바라본 커먼즈의 ‘공동’은 모두 다르다. 마찬가지로 연구물이 커먼즈라고 이야기할 때, 국공유지를 커먼즈라고 이야기할 때, 소와 풀과 목동의 목초지가 커먼즈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결코 환원불가능한 존재들을 등치시키면서 세계의 무질서에 어떠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이질적인 것들을 커먼즈로 수렴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가 커먼즈를 다시 보려는 이유이지만 사실 잘 해명될지 모르겠다.

### (3) 사이 지대로서의 커먼즈

한 가지 가능성은 커먼즈가 다차원/다방향/다중적 수준의 사이(in-between) 지대라는 점이다. 우리는 이미 커먼즈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와 미래를 산출하는 양방향의 존재임을 살펴보았다.

---

(2020) 등의 논의가 그 예시라고 할 수 있다. 네 가지 이야기 구조에 대한 논의는 우리의 논의가 끝난 뒤에 보론으로 보충하겠다.

거기에 더해 커먼즈는 개체주의(individualism)과 총체론(holism)이라는 두 개의 대립쌍 사이에 있는 부분적인 지대이다.<sup>8)</sup> 커먼즈 논의의 소중한 지점 중 하나는 어떠한 존재를 누군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근대적인 논리 속에 용인된다고 하더라도’ 부당할 수 있으며, 혹은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시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반대로 전체 혹은 모두에게 개방된 존재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하다. 하딘의 이야기처럼 모두에게 모든 방식으로 개방되는 순간 사이 지대는 지탱가능하지 않다. 사이 지대가 모두를 포괄하는 순간 그것은 아무것도 포괄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커먼즈는 애초에 개체와 총체 사이의 회색 지대여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하딘이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커먼즈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 규정되는 ‘시장과 국가 사이 존재로서의 커먼즈 논의’는 바로 이 사이 지대의 논의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만, 이 논의는 시장과 국가라는 대립쌍이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대립쌍이기 때문에 적절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 시장의 작동 체계 밖에 있는 것이 국가도 아니고, 국가 밖에 있는 것이 시장도 아니다. 현대적인 방식의 국가가 존재할 때에만 오늘날의 시장이 존재하고, 오직 현대적인 시장이 존재할 때에만 오늘날의 국가가 존재한다.<sup>9)</sup>

커먼즈가 적절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구별되는 존재들의 사이에 공동의 지대를 형성하고 획득할 때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박순열과 안새롬(2023)의 글은 흥미로운데, 이들은 커먼즈를 “어떤 사태가 서로 다른 사회적 체계들의 공통 작동에 개방되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사회적 체계가 해당 사태를 배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가치/주장(박순열과 안새롬, 2023: 135)”으로 규정한다.<sup>10)</sup> 이 논의는 사회적 체계라는 서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같은 수준에 있는 존재들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이질적인 관점 중 어느 하나가 우월하거나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게 타협하며 사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서 결코 서로를 포함하지 않는 이질적인 사회적 체계들이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사태의 사이 지대를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연구는 바로 그 사회적 체계들의 수준에서만 커먼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커먼즈의 열망과 다양한 차원의 커먼즈를 논외로 다루거나 무시해 버린다.<sup>11)</sup>

커먼즈는 이중적인 개체들 사이에 있는 지대로서 일종의 접촉지대(contact zone)일 수도 있고(해러웨이, 2021), 사회적 체계들 사이에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가치일 수도 있으며(박순열과 안새롬, 2023), 언어적 존재들 사이에 있는 지식일 수도 있다(Hess and Ostrom, 2007). 그 형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커먼즈는 사이 지대여야만 한다.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형성된 지대인지에 따라서 커먼즈의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과 무엇은 개체주의와 총체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달리 말하면 독점과 완전 개방의 사이 지대이다. 나는 이것이

8) 전체주의(totalitarianism)는 총체론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

9) 그렇다면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것은 커먼즈인가? 국가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너무 많은 것들이 커먼즈로 정의되거나, 어떠한 커먼즈도 찾을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종래에는 이러한 질문도 받게 된다. 국가나 시장은 커먼즈가 아닌가? 나는 이러한 미로의 길이 잘못된 대립쌍을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10) 박순열과 안새롬(2023)의 글에서는 공통과 공동을 구별하는데 이 연구는 그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11) 박순열과 안새롬(2023)의 연구는 &현실에 적합한 방식&(박순열과 안새롬, 2023)으로 커먼즈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사회적 체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커먼즈만을 남겨둔다. 그러나 이 글의 연구자는 커먼즈를 재구성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커먼즈를 통해 세계를 재구성하려고 한다. 커먼즈에게 어떤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커먼즈가 현실과 정합하는 개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능한 시공간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커먼즈의 스토리텔링을 되살림으로써, 세계를 짓는(worlding) 위험천만한 일에 커먼즈를 놓아두려고 한다(Ingold, 2010a; Haraway, 2013). 그러나 동시에 이때의 커먼즈는 근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견되길 기다리는 해결책이나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진보적인& 노선의 동력도 아니다. 그것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 내는 만들기 과정에 가깝다(Ingold, 2010b).

커먼즈가 결코 모두의 커먼즈가 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며, 무엇과 무엇 사이, 혹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커먼즈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커먼즈를 열망하는가? 그리고 무엇과 무엇 사이의 커먼즈를 만들고 있는가? 두서없는 이야기를 던져본다.

## 2) 사이의 지대로서 커먼즈가 지니는 난해함 (홍지은)

커먼즈 논의-실천을 통해 ‘커먼즈’가 반복해서 다뤄지지만, ‘그래서 커먼즈가 무엇인가’하는 질문과 마주하면 이를 명징하게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김지혜의 글은 이처럼 ‘아리송한’ 개념으로서 커먼즈를 마주하면서 겪은 난관과 고민에서 시작한다. 커먼즈 논의-실천의 장에서 길을 잃어온 경험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커먼즈 그 자체가 지닌 난해함을 해명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커먼즈가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커먼즈가 사이의 지대라고 할 때, 양극단의 두 축으로 설정하는 건 ‘근대성과 비근대성’, ‘개별주의와 총체론’이다. 그리고 ‘진자(pendulum)’로서의 관찰자가 이 사이의 지대에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이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커먼즈의 난해함은 ‘공동’ 그 자체가 가지는 특성에 의해 주요하게 설명된다. 커먼즈는 일련의 보편의 언어로 쓰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가진다. 결국 ‘복수의 관점들’, ‘이질적인 것들’, ‘환원불가능한 존재들’이 섞여 있는 커먼즈에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려 하면서 공허함과 혼돈이 생기게 된다. 이 같은 난해함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잠정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커먼즈를 무엇과 무엇의 사이 지대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차원/다방향/다중적 수준의 사이(in-between) 지대”로 커먼즈를 바라보면서, 이질적인 존재들이 공동의 지대를 형성하고 서로 위계를 만들지 않는 가능성을 열어보는 것이다.

커먼즈의 난해함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해명하려는 이 시도는 커먼즈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난해함과 난점이 있다. 김지혜는 커먼즈의 이야기성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질적이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커먼즈로 ‘수렴’하여 바라보는 것이 어떤 의미를 창출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그런데 커먼즈를 어떻게, 어디에서 관찰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무엇’에 관한 설정이 달라질 때, 무엇과 무엇의 사이의 지대로서의 커먼즈에 관한 서로의 말하기 또는 말 걸기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

또한, 커먼즈가 ‘적절함’ 의미를 얻기 위해 이 사이 지대에서 ‘적절하게’ 구별되는 존재들이 ‘적절하게’ 타협해야 한다고 할 때, 그 ‘적절함’은 ‘공동’과 마찬가지로 혼돈을 만든다.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의 차이와 사이 지대를 인식하는 것이 서로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는 단절이나 불화와 연결되는 지점에서는 어떤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러한 단절이나 불화는 ‘어긋난 개념’으로서 커먼즈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사이 지대로 커먼즈를 분석하고 해명하는 것은 ‘공동’이 가지는 차이, 그리고 시간성과 위치성을 다룰 수 있는 주요한 관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 일련의 난해함을 느낀 것은, 어쩌면 그동안 내가 근대성의 구획화에 익숙해진 논리 속에서 커먼즈를 다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글을 잠정적으로 마무리한다.

## 3) ‘사이 지대로서의 커먼즈’의 정치적 성격과 그 함의 (현우식)

이 글은 김지혜의 제안에 대한 홍지은의 질문, “무엇과 무엇의 사이의 지대로서의 커먼즈에 관한 서로의 말하기 또는 말 걸기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을까?”에 응답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사이(in-between) 지대로서의 커먼즈에 대한 김지혜의 입장을 재해석하고, 그 정치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사이 지대에서의 경합 가능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김지혜는 근대성과 비근대성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커먼즈를 위치시킨다. 이는 분석적 입과 동시에 규범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형태는 무엇이든 될 수 있으나 언제나 커먼즈는 사이 지대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근대성이 움직임을 통해서 형성된 선(line)을 고정된 점(point)으로 물화하고(Ingold, 2007), 이질적인 것들의 집합체를 정화(purification)(라투르, 2009)하려는 기획과 관련이 있다면, 비근대성은 그러한 기획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서사, 맥락, 상황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 근대성과 비근대성 사이에서 자(pendulum)처럼 동요하는 관찰자라는 제4의 항이 개입된다.

김지혜 역시 하나의 관찰자로서 커먼즈라는 단어를 맞닥뜨리고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이 동요를 커먼즈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즉 커먼즈를 근대적 기획 속에 위치지음으로써 해소하고자 하지 않는다. 오히려 동요를 다소간 유지하면서 커먼즈의 난해함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그가 초월적인 관찰자를 부정하는 관계론적 과학철학의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입장에서 관찰자와 세계는 복수이며, 어떤 관찰자도 세계 외부에서 세계의 총체성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김지혜, 2022: 27~34). 이는 세계를 단일하고 고정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황적인 실천과 실험의 과정이자 결과물이고, 이질적인 실천의 직조물인 세계짓기(worlding)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같은 글, 38).

이로써 커먼즈의 난해함 혹은 어긋남은 부정적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열린 시공간에서 어떻게 다양한 관찰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소통의 준거점이 되는 ‘공동’의 세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홍지은의 의문이 제기된다. 커먼즈가 하나의 객관적 대상이라면, 다양한 관찰로부터 어떤 공동성을 연역해낼 수는 있겠다. 그러나 커먼즈가 언제나 사이 공간에만 위치한다면, 다시 말해 근대성과 비근대성의 제3항(커먼즈)와 제4항(관찰자)가 모두 사이 공간에서 동요하는 존재들이라면, 관찰자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서로에게 가닿을 수 있을까?

이 문제에서 김지혜의 입장은 누구도 총체성을 파악할 수 없기에 그것은 끊임없이 열려 있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김지혜, 2023) 윤리적인 주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지은으로 하여금 “그동안 내가 근대성의 구획화에 익숙해진 논리 속에서 커먼즈를 다뤄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고백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로 인해 김지혜의 주장이 갖는 ‘정치적’ 성격이 약화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분명 그는 커먼즈 담론이 대상을 물화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커먼즈를 사이 지대에 놓아두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을 기존의 담론과 경합하는 위치에 적극적으로 위치시키기 보다는 또 하나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나는 그 이유가 ‘보편적인 것’을 둘러싼 경합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의 정치적 입장이 누구도 ‘보편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는 윤리적 입장에 압도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세계에 대해 보다 겸손한 관찰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다만 누구도 총체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보편이 언제나 ‘보편적인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것’을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것’을 둘러싼 투쟁에 근대성도 비근대성도 아닌 ‘사이 지대로서의 커먼즈’ 담론을 어떻게 기입시킬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커먼즈 담론과 김지혜의 주장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 간의 경합이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김지혜는 기존 담론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그것은 일종의 ‘상실과 회복의 서사’를 구성한다. 우리는 원래 갖고 있던 무엇인가(커먼즈)를 빼앗겼으며,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가 비록 대상을 물화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계의 다양한 투쟁들을 고무하는 이야기로 기능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김지혜의 이야기,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그들의 이야기보다 윤리적으로 더 낫다는 주장 - 혹은 그들의 이야기가 ‘근대적’이라는 비판 - 으로는 부족하다. 기존의 이야기들이 지식사회, 나아가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지식-권력으로서 어떤 진리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야기의 “그럴듯”함은 그러한 작업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는 ‘사이 지대로서의 커먼즈’의 정치적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태영)

김지혜가 글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커먼즈의 형용할 수 없음, 혹은 커먼즈 정의의 탐탁지 않음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김지혜의 대응은 홍지은이 정리한 바와 같이 “커먼즈가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자(pendulum)로서의 관찰자가 이 사이의 지대에 어딘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우식은 이러한 접근이 커먼즈의 난해함 혹은 어긋남을 부정적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공간을 열어 줄 수 있는 계기로 이해하는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열려진 시공간에서 ‘공동’의 세계가 부재할 때 다양한 관찰자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홍지은의 자기 (논리) 안의 근대성 고백을 자아낸 것도 어쩌면 바로 이 지점일 수도 있겠다. 나는 글을 읽으며 두 가지 의견을 갖게 되었다.

첫째, 김지혜의 문제의식이 ‘커먼즈’를 향한 것인지, ‘세계’를 향한 것인지 궁금해졌다. 이 글의 첫머리에 인용한 문장을 “세계의 형용할 수 없음, 혹은 세계 정의의 탐탁지 않음을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바꿔 읽을 때, 이러한 문제제기도 성립하는가? 나의 이 질문은 “세계를 단일하고 고정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를 상황적인 실천과 실험의 과정이자 결과물이고, 이질적인 실천의 직조물인 세계짓기(worlding)의 과정으로 이해하는”(김지혜, 2022: 38을 인용한 현우식의 글에서 재인용) 김지혜의 문제의식이 ‘커먼즈’라는 주제를 대할 때 어떤 특수함이 있는지, 그리고 커먼즈라는 주제를 경유할 때 김지혜의 문제의식이 어떤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 있을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형용할 수 없고, 탐탁지 않은 ‘커먼즈’일지라도 어떤 것은 커먼즈라고 부를 수 없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입장이다. 최현 등(2019)이 펴낸 책 『공동자원의 영역들』은 커먼즈(물론 이 책에서는 번역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어 커먼즈라는 용어 대신 ‘공동자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는 시점에 자연과 도시, 지식, 사회라는 공동자원의 4가지 영역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저자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공동자원 패러다임을 분석하는 책의 전제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현대 자본주의가 예컨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의 파괴와 같은 폐해를 낳고 있다는 진단 하에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최현 등, 2019: 19). 즉, 여러 다른 입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자원론은 “자본주의적인 사적 소유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다(위의 글).

정영신(2016: 97)은 “커먼즈 관리의 어려움은 비배제성이나 감소성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른바 오스트롬식 자원관리론적인 접근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최현 등(2019: 19)의 설명처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역시 최현 등(2019: 19)의 설명처럼 “공동자원과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 사적 소유에 기반한 자본주의 문제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가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정영신(2016)이 설정한 ‘우리’와 ‘모두’의 구도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공동체적 규범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형성한 규범을 긍정하는 입장도 근대적 사적 소유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최현 등(2019)과 정영신(2016)의 논의는 적어도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제도를 긍정하는 논의는 이들의 논리에서 커먼즈(혹은 공동자원)와 관련된 논의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리고 나도 이 정도의 ‘공동 입장’에 동의한다.

우리가 모임에서 한국에서 전개된 커먼즈 논의의 불화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 해왔다면, 김지혜의 글을 읽으며 그 불화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될 다른 방향의 질문을 떠올려보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먼즈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5) 커먼즈, 교차하는 사이 지대, 시공간적 맥락에서 (최희진)

김지혜를 비롯한 커먼즈에 애정을 느낀 사람들은 커먼즈 논의에 담긴 “양가적 흐름 속에서 길을 잃”는다. 우리가 커먼즈를 떠올릴 때 처음 설명할 때의 난처함을 느끼거나, 번역하는 데 어려움을 반복하거나, 사회실천에 중요한 지점을 짚기도 한다. 김지혜는 커먼즈를 “다차원, 다방향, 다중적 수준의 사이 지대”라고 언급하며, 우화, 작은 사례, 잊힌 역사, 미래 등 이야기를 낳는다고 말한다. 그의 말대로, 커먼즈는 이질적인/사회적인/언어적인 개체/체계/존재(들) 사이에 있는 지점이다. 또한 사이 지대로서 커먼즈는 더는 “모두의 커먼즈”로 수렴될 수 없다. 따라서 그는 커먼즈의 위치성을 포착하고 무엇과 무엇 사이의, 누구와 누구의 사이의 커먼즈를 설명하기를 요청한다. 나아가 홍지은, 현우식, 이태영은 자신의 시선으로 다시금 김지혜의 요청에 응답한다. 그리고 나는 나의 시선으로 이들의 말에 화답한다.

우선, 홍지은은 이질적인 존재들의 차이와 사이 지대로서 커먼즈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지 질문하며, “근대성의 구획화”에 익숙한 자신의 인식 틀에서 또 다른 난해함을 지적한다. 더구나 현우식은 김지혜가 가진 “관계론적 과학철학”의 관점을 진단하고 해석할 뿐 아니라 기존 커먼즈 논의에 대한 “진리효과”를 따져 볼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편 이태영은 세계 혹은 커먼즈를 향한 김지혜의 관점에 대해 다시 물으며, 기존 커먼즈 논의에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공통”의 지대 속에서 무엇에 “커먼즈”라는 이름을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다. 앞선 동료들의 논의는 제각기 방식으로 김지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커먼즈 논의에서 발생하는 “불화”를 표출한다.

한편 나는 김지혜가 설명한 “사이 지대로서 커먼즈”를 이해하는 방식에 동의하나, 시공간적 맥락에 둔 이해를 수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커먼즈의 움직임을 과거에서 발굴하고 미래에서 다시 찾을 뿐 아니라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발굴하고 변용하는지를 봐야 한다. 김지혜가 커먼즈를 사이 지대로 이해하는 방식은 커먼즈의 서사와 상황, 맥락을 포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또한 그는 “공동의, 공동에 의한, 공동을 위한 무언가”를 말하는 데 커먼즈의 위치성을 중요하게 강조한다. 어디에서 어디로부터 진자 운동이든, 선형의 양태이든,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시간 축만큼이나 공간 축에도 기점을 두어야 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은 커먼즈 이론과 더불어 실천과 운동 차원에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을 오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커먼즈(혹은 커머닝 실천)는 신체, 집,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등 여러 지리적 스케일을 넘나들며 생성하고 저항하는 토대를 구축한다. 덧붙여, 커먼즈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대안적인 장소나 헤테로토피아를 모색할 때, 이런 장소는 탈근대적 실천에 기인하기보다 실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 교차를 통해 긴장과 갈등에 기인한다. “거리와 도시는 다양한 사회집단과 세계가 조용하는 근접성의 위치”이며, “정치적 표현과 축제의 위치이자 투쟁과 배제의 위치로서 공간의 점유나 지배에 대한 권리가 상호 투쟁, 대립”한다(벨런타인, 2014: 25). 나는 특히 페미니스트 지리학자의 언어를 빌려

서 공간과 사회를 보는 방식을 채택하면서, 커먼즈의 실천, 운동, 이론에 보다 역동적이고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것들을 늘어놓는다. 끝으로, 커먼즈를 두고 불화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식론적 사이 지대에서 교차한다. (쓰거운 - 달가운 말 사이에서)

#### 6) 사고는 홀로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김지혜)

글을 돌려쓴 뒤로 ‘사이 지대의 커먼즈’를 구상하던 사고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흥미롭게도 나는 이 글을 돌려쓴 뒤로 커먼즈를 나름대로 ‘정리’했다. 그것은 지대라는 표현이 암시하듯, 이질적인 존재들이 접촉하고 뒤엉키는 장소라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나름의 정리는 ‘사이 지대’라는 용어를 고민하면서부터 촉발되었던 문제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정리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홍지은, 현우식, 이태영, 최희진을 경유해야만 존재한다. 홍지은, 현우식, 이태영, 최희진의 글은 나의 사고 속에 들어옴으로써, 나의 사고 ‘안’에서 나의 ‘밖’을 이룬다. 안에 이미 들어온 타자들을 어떻게든 소화하면서, 그리고 소화하지 못한 채, 즉 이해와 오해를 동시에 하면서 이미 존재한 사고를 변형시킨다.

홍지은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정말이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커먼즈를 어렵풋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정말로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 속에서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홍지은의 글은 얼마나 매끄럽게 나의 사고를 정리해주었는가? 근대성과 비근대성, 개별주의와 총체론, 그 사이에 쫓대 없는 관찰자! 그리고 커먼즈를 특정한 방식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과 혼돈을 홍지은의 글은 제대로 포착했다. 그리고 사이 지대의 ‘적절한’ 의미에 대해 그가 제안하는 질문은 이 글이 해명하지 못하는 바를 아주 적절하게 포착한다. 나는 결국 이 ‘사이’의 의미에 대해 더 생각해보았고, 시간성과 신체의 차원에서 ‘사이’를 보려고 노력하였다.

현우식의 글은 심지어 김지혜의 지난 글(2022)을 인용하면서 이 사고의 역사성을 추적하기에 이른다. 그에 따르면 커먼즈를 동요하는 상태에 그대로 놓아두려는 이 글의 시도는 김지혜의 세계지기 관점에서 놀랍지 않다. 김지혜 식의 겸손함 속에 있는 머뭇거림과 주저함을 포착한 현우식의 글은 ‘보편적’ 주장을 거부하는 윤리적 입장에 비겁함을 느낀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크게 공감하지만, 여전히 나는 주저하며, 그래서 정치성은 윤리성으로 쉽게 대치된다. 하지만 나는 열림과 가능성을 예찬하는 논의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커먼즈의 ‘역사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사이 지대는 수행적이고 미결정적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뿌리박혀 있는 장소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반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그 틈새, 그 여지, 그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내가 불편부당한 중립상태에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편향되어 있으며 편향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반총체론적 관점은 ‘보편적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보편적 주장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늘 편향적이다’라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제 이태영은 김지혜 논의의 근원적 맹점을 지적한다. 처음 제시한 사이 지대 논의에 따르면 세상 만물이 커먼즈가 아닌가? 아마도 이런 식의 존재론적 논의들은 종종 ‘세계’에 대한 일반론적 일원론을 지지하며, 그래서 커먼즈가 초역사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존재성처럼 느껴지는 뉘앙스를 지닌다. (사실 이 보편성을 통해서 현우식이 제기한 윤리로의 정치성 치환이 일어난다.) 이 문제는 흥미롭게도 최희진의 글을 읽으면서 해소된다. 최희진이 사이 지대의 시공간적 맥락에 대해 다시 물을 때! 내가 이미 커먼즈를 ‘지대’라는 장소로 사유하고자 했으면서도, 장소는 배경이 될 뿐 중심이 되지 못했다. 나는 그때까지 시간성에 씩씩하고 있었고, 그 시간성은 어쩌면 근대성이라는 매우 보편 ‘지향’의 시간성의 대항점들이었다. 하지만 다시금 공간론으로 돌아가 장소를 바라보았을 때, 장소는 역사성과 특이성을 지닌다. 어떤 장소는 사이 지대가 반드시 아니며, 모든 것이 장

소가 될 수도 없다. 이 지점에서 나는 커먼즈를 자원, 가치, 체계, 행위 등으로 보는 모든 시도에 불만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 정말로 나는 커먼즈를 자원, 가치, 체계, 행위로 환원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문제로 돌아왔다. 어떤 장소는 사이 지대가 아니라 완전히 채워진 공간, 결정된 공간, 그래서 수행이 중요하지 않은 공간이다. 커먼즈를 특수한 장소의 형태로 놓아두려는 이 글의 시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커먼즈와 비(非)커먼즈를 구별하는 정치적 선이 존재한다.

나는 다시 이 글들을 경유하여 ‘사이 지대’로 돌아왔다. 사이 지대 글 사이에 있었던 글들은 그 자체로 통로, 즉 사고 속에 존재하는 특수한 장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이 글들이 커먼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고의 통로로서 이 글들은 사이 지대이며, 또 다른 길을 유도한다(그러나 여전히,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결정하지 못하는 미결정성도 있다!).

## 6. 커먼즈의 소통, 중얼거리다, 멀멀(murmur) : 최희진으로부터

### 1) 커먼즈의 소통, 중얼거리다, 멀멀(murmur)

“무척이나 적막하군, 적막하기 짝이 없어, 아주 듣기 싫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적막함이 넘쳐나고 있어, 왕은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적막 자체는 아니고, 적막을 둘러싸고 있는, 적막에 어색하게 닿아 있는, 적막에 어렴풋하게 싸여 있는 적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 또는 적막으로 치장한 적막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 어쨌든 무서울 정도로 적막하군, 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는, 그 정도는 아냐.” (정영문, 2002: 5)

커먼즈 논의는 적막하다. 병상에 누운 왕의 중얼거림처럼 반복된다. 병든 왕은 차가운 방 안에서 창문 바깥과 복도 너머, 그리고 왕비의 표정에서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보며 계속해서 중얼거린다. 이 중얼거림은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혼잣말”이다(안미현, 2003: 107). 이런 독선적인 말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소통하는 타래를 이룬다. 왕의 중얼거림 속에서 찾은 단서는 ‘유희’와 ‘이해’의 문제다. 왕은 무위와 작위 사이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유희’의 문제를 평생 고민해 온 것이라 말하면서도 광대의 걸음걸이를 핀잔한다. 그리고 왕 옆에서 불편한 자세를 취한 광대의 고통을 이해해보려 자신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으며 또 중얼거린다. “오히려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의 고통만이 느껴질 뿐이야.”<sup>12)</sup> 우스운 광대를 이해하려다 우스운 자신의 꼴로 돌아온다. 이런 중얼거림을 따라가노라면 커먼즈 논의 속에서 아주 듣기 싫으나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적막에 어색하게 닿아 있는 점을 감지한다.

커먼즈 논의는 왕의 중얼거림이 울리는 적막처럼 어색하게 닿아서 반복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사회학자들이 공동자원과 공동체가 맺는 관계에 주목하여 공동자원을 재개념화하거나 보편적 권리의 회복을 요구한다. 우선 최현(2013)은 토지, 물, 바람 등 자연자원의 사유화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의 변화에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공동자원의 개념을 정교화하고 공공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화를 시도한다. 그는 특히 제주 공동목장과 바다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노력을 살핍으로써 공동자원을 오스트롬 식의 자연적·물리적 속성이 아닌 사회학적, 윤리학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정의한다(최현, 2013; 최현, 2019). 최현(2019)은 제주 어촌에서 해녀 집단과 공동체에서 공동자원인 바다밭을 관리하는 방식을 ‘인간생명의 존중’과 ‘공정성’을 중요한 원리로 작동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한편 정영신(2020)은 바다를 이용하는 해녀 집단과 다이버 집단의 논쟁을 통해 새로운 권리자의

12) 나는 정영문의 소설 『중얼거리다』(2002) 25쪽에 왕과 광대가 나눈 대화를 참조한다.

출현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과제를 보여준다. 오스트롬 식의 연구를 넘어서기 위한 이들의 연구는 공동자원의 재개념화뿐 아니라 ‘커먼즈’에 대한 맥락화, 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한다. 정영신(2020)은 오스트롬 식의 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 ‘우리의 것’에 한정된 형태를 관찰했기에 ‘모두의 것’으로서 보편적 성격을 누락한 점을 지적한다.<sup>13)</sup> 자원관리 패러다임에서 논의되는 커먼즈와 달리, 커먼즈의 정치론에서 커먼즈는 모호할지라도 보다 입체적인데, “자치와 필수재에 대한 보편적 권리를 구성하는 원리로 하는 정치적 경합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홍덕화, 2022). 구체적으로, 홍지은의 연구(2022)에서 커먼즈 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일정한 경계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우리’의 경계를 지속해서 재구성하면서 커먼즈 구성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확장했다고 파악한다. 홍지은의 연구(2022)에서 보듯, 커먼즈 실천은 “보편적 권리가 부재한 현실”에 직면해 공동체의 내부에 고립하지 않으며, 시민사회와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커먼즈 논의는 보편적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맞선 실험과 도전에 들러붙는다. 자본주의 도시에서는 공간의 상품화와 인클로저의 문제에 맞서 커먼즈를 되찾거나 만들으로써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포착한다(박배균 외, 2021). 서울시 마포구 공덕역 인근 경의선 철도 부지<sup>14)</sup>를 점유(스콧)한 운동(이하 경의선공유지 운동)은 도시 커먼즈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스콧은 기존 제도나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집합적으로 삶의 재생산 양식으로 도시 커먼즈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권범철, 2019). 재개발 탓에 집과 가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비롯하여 예술가와 활동가, 연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경의선공유지에 집산하여 해방적인 또는 위태로운 체험을 나눴다. 경의선공유지에 모인 이들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배제와 내몰림의 문제에 대항하여 시민의 자치와 자율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26번째 자치구’를 선언하였다. 경의선공유지는 대도시 서울에서 내몰린 ‘도시난민’이 처한 상황에 ‘공유지’라는 진지를 통해 일시적 캠프를 표방했다(김상철, 2021). 이런 장소 투쟁은 도시 커먼즈 운동에 중요한 거점이며, 새로운 삶의 영토를 창출하는 것이다(윤여일, 2022). 경의선공유지 상근활동가 김성은의 말에 따르면, 길어야 3개월이라 했던 곳이 5년 동안 지속하면서, 구청에서 계속해서 보내는 공문과 민원에도 26번째 자치구의 구청장 선출과 반상회, 책사대회 등 의견수렴기구가 생겼고, 이곳을 커먼즈라 명명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등의 결합으로 커먼즈네트워크가 형성됐다.<sup>15)</sup> “비합법적인 활동이라는 것에 쫓고 공문 한 장에 벌벌 떨고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해도 돼요?’”라고 물었던 그가 이제는 공유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공유지라는 삶의 영토는 견고하거나 단단한 토대를 이루기보다 언제나 일시적이고 위태로운 축대에 놓인다. 당시 행정당국의 자진 철거하라는 압박 속에서 ‘연구자의 집’<sup>16)</sup>을 세울 공간에 펜스가 쳐지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안정성을 크게 흔들며 불안함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박인권 외, 2019). 더구나 경의선공유지 운동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한계를 투박하게 정리하자면, 정부기관의 공공성에 대한 협소한 해석과 시민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와 권리의 부재이며(정영신, 2020), 국공유지와 공공공간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문제(윤여일, 2022)로 볼 수 있다.

커먼즈 논의는 이해의 고통을 수반한다. 박인권 외(2019)는 경의선공유지운동을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 사이에 나타나는 내재적 모순을 파악하는데, 특히 공동체 차원에서는 상이한 집단 간 또는 집단 내 구성원 간 서로 다른 출신 배경과 참여 동기, 이용 목적 등을 가

13) 정영신(2020)은 커먼즈 연구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으로써 신제도주의 기반에 자원관리론과 구성주의 접근에 커먼즈의 정치론으로 나눈다.

14) 경의선공유지 운동은 국유지인 경의선 철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였다(정기황, 2021).

15) 『안녕, 경의선공유지』(2022)는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의 기획으로 경의선공유지 운동을 정리한다.

16)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자의 집&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를 비롯한 연구자들이 지식을 시민들과 자유롭게 주고받는 지식 커먼즈를 이룩하고자 한다.

진 이질성에도 공유지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목표를 실천하는 동질성이라는 긴장을 보여준다. 오히려 윤여일(2022)은 여러 경로를 통해 만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공유지를 둘러싼 간극과 갈등을 통해 자율과 협력, 공유를 위한 커먼즈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박순열과 안새롬(2023)은 커먼즈를 자원-공동체-제도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며, 경의선공유지를 “서로 다른 관심과 코드들의 일시적이고 느슨한 겹침으로 인해 불확실하고 모호한 객체”라는 존재로 파악한다. 특히 경의선공유지 운동에 모인 ‘시민’(상인, 예술가, 동호회 회원, 연구자, 운동가 등)은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 접속하여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공동의 무언가를 달성하는 자치 공동체의 시도는 실패로 이어진다.<sup>17)</sup> 다시 말해 박순열과 안새롬(2023)은 사람들 사이의 공동성의 기반이 아닌 체계들 사이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커먼즈 정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함께 하기 위한 차이를 조정하고 집합적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만들면서 변화와 소통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들의 예시(박순열, 안새롬, 202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포구청 직원이 퇴근 후에 경의선공유지에 산보객으로 등장한다면 그는 단지 산보객인걸까. 사실상 개인이 어떤 사회체계에 접속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짧은 식견과 경험에 비추어보면, 경의선공유지에서 열린 학술행사나 녹색당 행사, 밭고 총회, 연구자의 집 상량식에 참여하거나 구루마를 끝낸 야마가타 트웝스터<sup>18)</sup>를 따라 경의선 숲길을 걷거나 산보객으로 등장할 때에 나는 어떤 사회체계에 속해서 움직였는지 사실 잘 모르겠으나, 주로 동료들 만나고 놀려고 갔었다. 더구나 어떤 때에는 경의선공유지에 있다가도 잠깐 휴식을 취하러 경의선 숲길 옆에 있는 빌딩 1층 스타벅스에 가서 소비자로서 있었다. 어쩌면 우리는 ‘동일한 경의선공유지’를 포착하기보다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서 다층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먼즈의 정치와 소통을 논할 수 있다.

커먼즈 연구와 실천을 가로지르는 치장한 적막 속에서 연구자는 무엇을 하는가? 그 속에서 연구자는 무얼 느끼는가? 연구를 위한 현장인지, 현장을 위한 연구인지, 연구자의 개입과 사회적 실천은 어디까지인가? 연구-현장의 개입 정도나 실천 방식은 연구자의 위치성에 따라 다를 테다. ‘전투적 연구(militant research)’라는 현장 조사 방법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지식 생산과 실천 사이의 접합점을 만든다(한윤애, 2016). 이때 연구자는 구체적인 현장에 투입하여 공동체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실천과 지식의 생산을 넘나든다. 한윤애(2016)는 서울의 투기적 도시화 경험에서 내몰림의 위기에 직면한 테이크아웃드로잉(예술작업장이자 전시공간)의 ‘재난연구소’라는 레지던시 연구자이자, 동네 주민으로 현장에 참여한다. 그는 당시에 힘겨운 투쟁에도 임대차인 간의 합의로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이후에 열린 축제에 참여해 축하에 동참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합의라는 점에 공허함을 느꼈다고 말한다(한윤애, 2016). 결국엔 거점 공간을 잃고 또 다시 ‘난민’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고 질문받는다”(한윤애, 2016). 마찬가지로 이승원(2023)은 학술의 장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여와 실천을 위한 ‘투사적 연구’를 수행하며, 현장 연구와 토론의 장을 통해 이론적 정교화 작업을 약속한다. 이승원의 연구(2023)는 도시 커먼즈를 매개하는 우울하거나 풍자적인 뒤틀림에 주목하며 파괴되거나 변형된 커먼즈(제주 강정마을의 구럼비, 펜스 처진 경의선공유지 등)를 떠올린다. 또한 그는 도시 커먼즈를 매개로 하는 뒤틀림<sup>19)</sup>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동을 투기적 도시의 정념에 부착된 불안에서 나아가 기쁨과 환대를 희망한다(이승원, 2023). “국가와 자본에 의해 공간과 사회적 관계가 영토화”를 거부하는 ‘틈’을 찾는 소란은 그 자체의 의미를 가진다(한윤애, 2013). 하지만 투기적 도시화에 대항하는

17) 박순열과 안새롬(2023)은 &무수한 기능체계를 가로지르는 공동의 무언가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이런 시도는 현대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을 오인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문제와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실상에 맞게 제시하는 게 어렵다고 지적한다(174).

18) 야마가타 트웝스터는 민중엔터테이너이자 책방 만유인력을 운영 중이다.

19) 아상블라주로서의 도시와 도시 구성체 사이의 뒤틀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이승원(2023)의 논의를 참고하라.

작업에 틈을 만들어 소란스럽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공통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 마치 해방적인 탈출구나 해방적인 장소, 생추어리 등의 표현처럼 말이다.<sup>20)</sup> 도시 커먼즈라고 명명한 곳을 잃은 유감에도, 실상은 왕의 시중을 든 광대와 광대의 고통을 이해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왕의 중얼거림. 그에 응하는 광대의 말. “지금껏 저는 앓고 싶을 때에도, 눕고 싶을 때에도 서 있어야만 했죠. 그게 어떤 기분인지 폐하께서는 알 리가 없겠죠.” 도시의 문제에 대하여 함께 체험하는 방식만으로 우리의 신체가 변용할 만큼 서로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 2) 커먼즈 논의는 적막하다? (이태영)

“커먼즈 논의는 적막하다”는 문장으로부터 다음의 질문들이 떠올랐다.

첫째, ‘적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질문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 글쓴이의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정리해보려 한다. 최희진의 글에서 묘사되는 커먼즈 논의의 적막함은 아무 소리도, 자극도 없는 고요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적막함에는 중얼거림(murmur)이 있다. 그것은 왕의 중얼거림이다. 왕의 중얼거림은 누구를 향하는가? 광대를 향한다. 왕의 중얼거림, 그리고 왕과 광대 사이의 적막. 이러한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적막함에는 고요함이 아닌 중얼거림이 존재하고, 그것은 위계(왕과 광대)와 방향(왕으로부터)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이다. 이 묘사를 따라가면, 커먼즈 논의의 적막함 역시 위계와 방향에 의해 규정되는 중얼거림으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최희진의 글은 커먼즈 논의를 구성하는 어떤 위계와 그 위계로부터 만들어진 적막, 그리고 그 적막을 채우는 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왕과 광대라는 비유에 대응하는 행위자는 누구인걸까? 연구자와 시민 혹은 연구자와 활동가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 다소 불명확한 광대에 비해 왕은 비교적 명확하게 연구자를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둘째, 커먼즈 논의만 ‘적막’한가? 다른 ‘논의/연구’은 어떠한가? 글에서는 커먼즈 논의의 적막함을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연구와 실천, 연구와 현장, 연구와 대중 사이의 괴리는 좀 더 (범위가) 넓고, (시간적으로) 깊은 주제이기도 하다. 사회과학이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비판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넓게 형성되어 있다.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사회학자 부라보이(Michael Burawoy)가 촉발한 공공사회학(public sociology) 논쟁이 대표적이다. 부라보이는 사회학이 전문지식을 쌓아올리고 상식을 과학으로 번역하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비판했고, 대학 안에서 현실 세계와 분리된 고립을 문제 삼았다. 최희진의 글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전투적 연구(militant research)’ 개념도 유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Russell(2014)은 사회운동(activism)과 학계(academia)의 관계를 고찰하며, 연구는 진리를 전달하는 사회적 과학이라기보다는 싸울 수 있는 도구를 생산해야 하는 예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운동과 학계를 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대학은 현재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생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투적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연구 방법론이자 태도를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연구하는 행위, 혹은 연구자의 행위성이 갖는 고립과 단절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꾸준히 존재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이에 대응했다. 그런 점에서 커먼즈 논의는 학계의 고립과 단절을 문제 삼고, 실천과 분석을 연결하려는 작업에 가깝다.

셋째, 그렇다면 커먼즈 논의는 왜 적막한가? 최희진이 제기한 ‘적막’의 문제는 고요함의 문제는 아니다. 즉, 고립과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현장/실천과 연결되고자 한 시도가 ‘중얼거림’이 되어 버린 것 아닌지 하는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실천과 분석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실천과 분석을 연결하려는 태도(‘전투적 연구’와 같은)가 중얼거림에 머무르는 문제.

20) 『커먼즈의 도전: 정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2021)의 발간을 앞두고 펼친 대담회 중에 나온 말이다.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적막하지 않은 ‘연구/논의’는 가능한가? 마지막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가능하지 않다’에 가깝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소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중얼거림’은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다. 중얼거리는 와중에 연결의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연구와 실천, 연구자와 시민/활동가/대중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중얼거림의 위계와 방향은 문제가 된다. 과연 왕과 광대의 위계, 왕의 중얼거림이라는 비유는 커먼즈 논의에 대한 평가에 적합한가? 잘 모르겠다. 왜 이 묘사의 구도에서 커먼즈 논의는 ‘왕’의 중얼거림이 되었을까?

### 3) 커먼즈 논의의 중얼거림과 이해의 문제 (홍지은)

최희진의 글은 정영문(2002)의 소설 『중얼거리다』 중에서 ‘적막함’에 관한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시작한다. 이 소설은 병상에 누운 왕의 끝없는 독백으로 이뤄져 있다. 병든 왕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다. 여기서 중얼거림은 “말화가 수신자를 찾지 못한 채 공허한 울림으로 남게”된 것이며,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폐쇄적인 구조”를 지니게 된다(안미현, 2003: 119). 사회적 맥락에서 이탈한 이의 중얼거림은 끝없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오며 외부에 가닿지 못한다.

최희진은 이 중얼거림이 울리는 적막에서 커먼즈 논의와 마주한다. 커먼즈 논의에서 “아주 듣기 싫으나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듣기 어려운 적막에 어색하게 닿아 있는 점을 감지”하는 것이다. 정영문의 소설을 통해 커먼즈 논의를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지점에서, 이태영이 질문하듯이, ‘적막하다’는 것의 의미나 왕과 광대라는 비유에 대응하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영문의 소설이 “역사성 혹은 사회성 나아가 사회적 시간성의 배제를 의도적으로 지향(안미현, 2003: 119)”한다고 할 때, 커먼즈 논의와 맞닿은 비유로서 적절한가의 문제가 남는다.

다만, 이 글에서는 비유의 문제를 파고들기보다 최희진이 글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이 무엇이었는데 집중해보고자 한다. 최희진은 왕의 중얼거림에서 삶의 전혀 다른 차원을 가능케 하는 ‘유희’와 결국 자신의 문제로 되돌아오는 ‘이해’의 문제를 포착한다. 커먼즈 논의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에 둘러붙어 보편적 권리의 회복/되찾기를 요구한다. 이 같은 커먼즈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찾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해의 고통”을 수반하는 논의이기도 하다. 이때 ‘이해’의 의미도 다양하게 뻗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최희진의 글에서 주목한 것은 크게 두 측면이다.

먼저, 하나는 서로 다른 개인/집단의 위치성과 커먼즈에 관한 이해의 문제이다. 커먼즈를 회복하거나 되찾으려는 실험과 도전은 제도과 권리의 부재로 인해 이해받지 못하며, (잠정적인) 커먼즈를 두고서 서로 다른 배경과 동기, 그리고 목적을 갖는 개인/집단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충돌하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최희진은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 위치한 이들의 차이와 모순의 지점을 포착하면서 “서로 다른 사회체계에서 다층적으로 접속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이태영이 짚고 있듯이 “위계와 방향”의 문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이태영은 이 문제를 주로 연구와 실천의 관계에 관한 맥락에서 제기했지만, 커먼즈 논의에서 나타나는 위계와 방향에 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도 연결해볼 수 있다. 예컨대, 공동의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구성원들 간에 위계가 만들어지는 지점이 있지는 않은가? 참여의 정도와 기여 등에 따라 달라지는 위계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체계 안팎의 위계는 어떻게 다를 것인가? 등의 질문도 주요하게 다뤄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자의 위치성에 따른 이해의 문제이다. 앞선 글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듯이, 이 문제는 커먼즈 논의뿐만이 아니라 학술과 사회/현장/실천의 관계에 관한 오래된 논의와도 겹친다. 최희진은 연구자가 사회/현장/실천에서 무엇을 하고 또 느끼는지 묻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간의 상품화나 인클로저 같은 도시의 문제에 대항하는 커먼즈의 실천/현장에 함께 “체험하는 방식”만으로 (...) 서로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묻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실천/현장과

연결을 시도하는 ‘전투적 연구’나 ‘투사적 연구’를 수행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 감각”을 느끼는 이해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연구자의 ‘체험’과 이해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자가 구체적인 현장/실천에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때에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질문이 생기기도 한다. 물론 현장/실천에서의 체험이 보다 밀도 있는 이해와 분석으로 이어질 수는 있으나 ‘체험’만을 이해의 지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왕의 중얼거림과 이해가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로 돌아왔던 것과는 달리 연구자를 비롯해 각자 위치에 따른 자신의 이해로만 반복해서 돌아오지 않고 서로에게로 향할 때, (우연적인) 공통 감각을 느끼는 지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 4) 커먼즈 논의를 향한 미학적 탐구가 꿰는 것, 그리고 지나친 것 (김지혜)

정형화된 세계에 균열을 내는 미학적 글쓰기는 은유의 형태로, 메타포(metaphor)의 어원처럼 즉 특정한 곳에 있었던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주변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다(김애령, 2013). 나는 아마 이것이 최희진이 시도한 글쓰기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그는 지금까지 이해해보려고 한 것들, 커먼즈의 서로 다른 논의들을 하나의 선으로 꿰뚫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낮은 지평 속에 그것들을 배치함으로써 학문세계의 풍경을 소설의 한 장면과 등치시킨다. 그러니까 그는 커먼즈에 대한 무언가를 말한대기보다는 커먼즈를 논의하는 지식의 장에 대해 말한다. 그 장은 실상 대단히 독선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스꽝스럽다. 나는 최희진의 글이 풍자적인 연극처럼 칼을 숨기고 있다고 느껴진다. 한 편으로 나는 최희진이 정확한 어떤 것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중얼거리기만 하는 것들, 서로 소통하지 않는 것들, 그것이 학문세계의 한 풍경인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스케치가 그냥 지나친 것은 무엇인가? 정말로 학문세계의 논의들은 중얼거리기만 하는가?

나는 학문세계의 언어들이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번역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계속해서 메타포를 양산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것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만드는 작업, 즉 오해의 중얼거림을 계속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이태영이 말했던 것처럼 적막하지 않은 연구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나는 바로 그 오해야말로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슈티히베는 “과학이라는 것이 이론에 의지해 세계를 관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어울리지 않는 관점, 즉 관찰되는 개인과 기관의 체험과 어긋나는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학은 독특한 방식으로 낮춤의 관점을 육성한다(Stichweh, 1991; 베테, 2016으로부터 재인용).”고 말한다. 우리가 같은 것이라 여기는 것에서조차도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미학적 탐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생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희진의 글은 연구자에게 주의를 주는 경고문과 같다. 나는 최희진의 글이 이태영이나 홍지은이 언급했던 것처럼 누가 왕이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의 문제로 보지는 않는다. 나는 오히려 왕은 중얼거리는 위치에 있는 자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자기 말만 하는 자, 소통할 필요 없는 자가 곧 왕인 것이다. 소통되지 않는 커먼즈 논의의 난잡한 풍경들 속에서 중얼거리자는 자들은 곧 왕이 된다. 따라서 서로에게 향하여 공통 감각을 느낄 때 왕의 자리에서 해방된 연구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홍지은의 말은 아마 최희진이 기다렸던 말이 아닐까 싶다. 추정컨대 그것이 최희진이 글 말미에 “신체가 변용할 만큼 서로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중얼거림을 멈추고 연구자는 현장에 섞여 들어갈 수 있는가, 기꺼이 변용될 수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 자신이 왕이 되지 않길 소망하는 것 같다. 하지만 왜인지 그 역시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적막은 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도 보인다. 나는 우리의 공통 감각에 대한 시도가 중얼거림을 잠시 멈추고 소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중얼거림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조금 다른 이야기이지만, 박순열과 안새롬(2023)의 논의에서 말하는 사회체계 논의에서

사람은 사회체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중요한 연구 단위가 아니므로 최희진이 질문했던 ‘나는 어느 체계에 속해서 움직였는가’라는 질문은 성립되지 않는다. 사람이 체계에 접속해있다는 표현은 사후적인 관찰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최희진은 계속해서 이 논의를 혼동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것은 사소한 부분이고, 중얼거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이 된다.

#### 5) 중얼거림에 대한 중얼거림 ... 이 낯은 우연한 해방의 순간에 대하여 (현우식)

가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 이전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놀랄 때가 있다. 위 글들이 전개되는 과정이 나에게서는 그랬다. 솔직히 처음 최희진의 글을 읽었을 때는 ... 난감하다고 느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글이 다소 냉소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로의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있지만 나는 사실상 그가 이해할 수 없으며, 그것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진실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이런 방식의 논의가 공통감각을 확장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일까?

최희진의 글이 냉소적으로 다가왔던 이유 중 하나는 그의 논의가 커먼즈가 아닌 연구/논의 일반에 대한 논의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떤 불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전개된다고 느껴질 때 나는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 이태영의 글은 그 무력감을 조금 덜어주었다.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최희진의 글을 커먼즈 담론과 실천 ‘내에’ 정박시키고자 한다. 하나는 ‘왕의 중얼거림’이라는 비유의 적절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중얼거림이 위계와 방향에 의해 규정된다는 문제이다. 이를 통해 그는 중얼거림 일반에 대한 문제를 중얼거림의 위계와 방향의 문제로 전환시킨다. 말하자면, 중얼거림 자체가 아니라 커먼즈 담론과 실천에서 중얼거림이 어떤 효과를 낳는지에 주목한다.

홍지은은 이태영이 제기한 두 번째 문제를 조금 더 확장한다. 그는 이태영이 제기한 지적을 반복하기보다는 그것을 최희진이 제기했던 고통의 이해가능성의 문제와 다시 연결시킨다. 그에게 중얼거림은 연구자 혹은 개인/집단이 각자 위치에 따른 지식에 머무르면서 (마치 왕이 광대의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만 결국 자신의 고통만을 이해하듯이) 자신에 대한 이해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상황과 관련된다. 결국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려면, 홍지은의 표현을 빌자면 “우연적인 공통 감각”을 느끼는 지점이 만들어지려면 이런 중얼거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지점은 구체적인 현장/실천에 대한 공동의 ‘체험’으로부터 쉽게 얻어질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선부른 시도가 반복된 중얼거림을 양산한다는 것이 홍지은의 주장이다.

이태영과 홍지은의 글을 거쳐 최희진의 문제의식은 커먼즈 담론과 실천 ‘내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었고, 이 과정에서 최희진의 논의는 단순히 반박되기보다는 확장되었다. 그런데 김지혜는 다시금 정박된 최희진의 글을 풀어놓는 듯하다. 그는 최희진의 글에서 일종의 미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본다. 그는 최희진의 글을 커먼즈 담론과 실천에 대한 메타포(metaphor)로 해석하고 그것이 어떤 세계를 열어 놓았는가에 주목한다. 이태영과 홍지은이 제기했던 ‘왕의 중얼거림’이라는 비유의 적절성 문제와 위계와 방향의 문제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왕은 “중얼거리는 위치에 있는 자” 그 자체이며, 최희진의 글은 서로를 향하여 공통감각을 느낄 때 각자가 왕의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경고문”이다. 김지혜는 이로써 최희진의 글로부터 고통뿐만 아니라 기대 또한 읽어내고자 한다.

글을 전부 읽고 나니 처음 최희진의 글을 읽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다. 이 글 모두는 어떤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최희진의 글을 포함하여) 누구도 쉽게 냉소하거나 결론 짓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각자의 관점은 다르지만, 무언가를 쉽게 기각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문제의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했다. 이로 인해 나는 모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어떤 중얼거림으로

부터 잠시나마 벗어난 것 같았다.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는지, 혹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우선은 이 느낌에 대해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

#### 6) 동료들의 답장에 대한 답장, 무위와 작위 사이에 (다시 최희진)

나는 앞선 글을 통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콘크리트 벽에 던진 공이 가볍게 또는 묵직하게 튕겨나가 다시 어딘가로 굴러 떨어졌다. 삼개월동안 이 공을 주워 다시 던지기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얼거리는 왕처럼 잠시 생각에 잠기고 오월이 되어서야 드디어 우리의 대화의 장을 열어젖혔다. 동료들은 나의 글을 커먼즈 담론과 실천에 붙들어오게 하거나 풀어놓거나 제각기 방식으로 느꼈다.

내가 정영문의 소설 『중얼거리다』를 참조한 점은 커먼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방식을 달리 해보고 싶었다. 커먼즈 논의는 더는 낯선 게 아닌데 어떤 설명에 있어서 다른 지점을 찾고 싶었다. 내가 커먼즈를 이야기하거나 실천하는 데 무력감, 상실감, 좌절감 등에 붙들려 ‘중얼거림’을 먼저 떠올린 건 아닐까. 정영문의 소설에서 무력한 왕은 혼잣말을 하고 또 침묵하고 그 침묵에 대해 질문한다. 소설은 회곡 형식을 취하여 장르를 흐트러나 인물의 말이나 행위를 특정한 의미에 가두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왕의 중얼거림에서 타자를 향한 침묵과 질문을 전개하는 방식을 참조하고 싶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커먼즈에 대한 학술연구를 읽고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식, 그러니까 가장 익숙한 방식을 통해서 글을 전개하였다. 나의 근원적인 물음은 왕의 중얼거림에 냉소를 띠거나 여타 연구자를 향한 공격이라기보다 사실상 커먼즈의 존재와 실천에 대한 “무위와 작위 사이에” 있다.

내가 어설픈 던진 공은 무위의 세계에만 맴돌다 튀어나간 걸까. 다시 주워 와서 커먼즈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린다. 그때는 온통 국유화/사유화된 도시 공간에서 커먼즈를 대안적인 방식이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커먼즈를 향한 믿음이라기보다 커먼즈를 다루는 사유와 행위에 대한 즐거움과 흥미를 가졌다. 그때의 즐거움은 문제 해결과 전환이라는 논의를 통해 나에겐 갑갑함으로 둔갑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유희의 문제와 무위의 세계 속에 커먼즈를 남겨두기를 바랐을까. 그렇다면 나는 커먼즈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우회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나의 언어와 실천은 현실세계나 학계에서 그럴듯하게 쓸모가 있는 걸까. 나의 중얼거림은 대화의 장에서 더는 들을 수도 없게 되지 않을까.

<우리들의 멀멀!> 동료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를 다음과 같이 메모로 옮긴다.

마지막 답장을 쓰고 난 후, 우리는 7월 제주 워크숍에서 다시 만났다. 동료들은 나의 마지막 답장을 보고 자신들이 마치 콘크리트 벽이 된 기분을 느꼈다고 했다. 동료들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가 공을 치는 행위 그 자체처럼 즐겁고, 그 과정에서 상대와 조우해 서로 축적되는 소통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린 소통하면서 (같이 또는 스스로) 변화하거나 차이나는 지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우식) 희진의 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마음을 변화시켜야겠다는 마음이 크지 않아 냉소적으로 읽힌다. 나는 그게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는 굉장히 고심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위험하지만, 연구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건 남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 자체를, 콘크리트로 생

각한다든지, 이런 거는 나한테는 힘이 막 빠지는 느낌처럼 다가오는 거야.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어떻게 됐든 간에 소통을 시도해 볼거야.

(제제) 대화를 함으로써 둘다 변화한다고 생각해.

(태영) 기대가 없다면, 나를 바꾸려고 해! 궁극적으로 설득하고 싶어! 그렇지만 한 방의 설득을 위해서 '원기옥'을 모은다고 할까. 굵직한 것을 만들어 내려면 벽이랑 연습하다가 진정한 상대가 나타났을 때 그 공을 칠거야. 인생에서 그 한방을 치기 위해 기다리는 거지.

(우식) 상대방한테 계속 쳐보는거야, 닿으려는 거야.

(태영) 나는 나를 바꾸려고 하거든. 반응은 하겠지만. 같이 상대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입장이 다를 수 있어. 내가 바꿀 수 있고 한방을 기다리고! 그 벽을 찾아 던질거야.

(우식)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참지 않아! 회복을 빨리해서 계속 시도할 거야. 난 사람한테 계속해서 던질거야.

(지은) 회피하는 게 아닐까? 굳이 안 좋은 불이면 치려고 시도하지 않아. 함부로 던지지도 않고. 일단 그저 보고 있는 거야.

(제제) 내 안에 이미 들어온 '타자'라고 생각해. 내가 이해한 '타자'! 대화는 상호적으로 이어지는 거야.

내가 콘크리트로 느껴졌다는 게 섭섭해!

(태영) 콘크리트로도 괜찮아

## 7. 나가며

글의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이 작업의 시작에는 커먼즈 논의 속의 불화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커먼즈를 주제로 하는 연구자,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행사에서 확인한 불화의 순간이 이 작업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모임 구성의 계기가 되었을 뿐, 이 보고서는 기존의 어떤 논의와 경합하거나 대안적인 개념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물론 다섯 명이 제출한 발제문과 그에 대한 논평들은 각각 기존의 어떤 입장과 경합하거나 보완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입장'들'이 이 보고서 안에서 하나의 입장으로 통합되지 않는다.

우리의 작업이 대안을 제출하고자 한 주제는 '대안적인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전제하며 불화를 확인하고, 그 불화 속에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연구모임의 다섯 명은 커먼즈 논의 안에서 커먼즈라는 개념이 각자의 욕망과 관심에 따라 활용되며 발생한 불화의 감각을 규명하고 싶어 모였지만, 실은 다섯 명의 욕망과 관심도 전부 다르다는 것을 논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 작업은 우리에게 서로의 불화가 어떤 조건에서 확인될 때 그 불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명되며,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의 구분이 가능해

질까 가늠해보는 실험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이제 다시 시작되는 협력적 논의의 바탕이 되는 경험이고, 우리는 협력적 글 쓰기, 협력적 토론의 새로운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글쓰기 실험에 함께 동참할 동료들도 기다리고 있다. 횡적으로(새로운 발제자가 되어주시라), 종적으로(다시 릴레이를 이어주시라) '000 속 불화찾기'의 과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sup>21)</sup>

## 참고문헌

-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사무국·김배리·김성은·김상철·박상덕·박선영. 2022. 『안녕, 경의선공유지』. 뿔간소금.
- 김광식. 1996. “수도권 신도시건설의 과제.” 『국토』 174: 6-13.
- 김도균. 2018. 『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미경. 2019. “이승만 정부의 재정위기와 환율정책 논쟁(1953-1960): 재정 사회학적 해석.” 『아세아연구』 62(4). pp.99~132.
- 김상철. 2021. “26번째 자치구와 공유지 운동.” 박배균 외 엮음.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박배균 외 엮음). 뿔간소금. pp.123-145.
- 김애령. 2013. 『은유의 도서관: 철학에서의 은유』. 그린비.
- 김지혜. 2022. “해양쓰레기와 함께 세계 짓기: 지구적 해양보전에서 나타나는 존재들의 연합과 분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 2023. “기후의 물질성과 ‘우리’의 유동성: 924 기후정의행진과 류대(fluidarity)의 감각”. 『ECO』 27(1). pp.53-96.
- 권범철. 2019. “신자유주의에서 도시 커먼즈의 흡수: 창조도시 전략과 예술 행동을 중심으로.” 『공간과사회』 29(3): 13-61.
- 권범철. 2023. 「국가를 공동하기」. 2023 국제 E.S.G.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 네그리·하트. 2001. 『제국』. 윤수중 옮김. 이학사.
- 라인보우, 피터. 2021. 『도둑이야!: 공동장, 인클로저 그리고 저항』. 서창현 역. 갈무리.
- 라투르, 브뤼노. 2009.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홍철기 역. 갈무리.
- 랑시에르, 자크(Jacques Rancière). 2015. 『불화: 정치와 철학』. 진태원 역. 도서출판 길.
- 레비 스트로스, 클로드. 2018.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류재화 역. 문예출판사.
- 무페, 샹탈(Mouffe, Chantal). 2012. 『정치적인 것의 귀환』. 이보경 역. 후마니타스.
- 미야모토 타로. 임성근 옮김. 2011. 『복지정치 : 일본의 생활보장과 민주주의』. 논형.
- 박배균·이승원·김상철·정기황. 2021. “서문.” 박배균 외 엮음.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뿔간소금. pp.8-17.
- 박서현. 2023. “커먼즈 철학으로서의 공동주의: 자기 변화의 윤리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68. pp.175-203.
- 박순열·안새롬. 2023. “현대사회에서 커먼즈 논의의 정합성에 대한 검토: 경의선공유지를 사례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7(2): 135-191.
- 밸런타인, 질(Valentine, Gill).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 역. 한울아카데미.
- 베버, 막스(Weber, Max). 2017. 『직업으로서 정치』. 이상률 역. 문예출판사. [ebook]
- 베테, 칼 하인리히. 2016. 『사회의 스포츠: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에 기초한 연구들』. 송형석·이철 역. 이론출판.
- 손낙구. 2022. 『조세 없는 민주주의의 기원: 1934~60년 세무 기구 분석』. 후마니타스.
- 아메드. 2023. 『페미니스트 킬조이』. 김다봄 역. 아르테.
- 안미현. 2003. “증얼거림의 미학- 토마스 베른하르트와 정영문의 소설에 나타난 해체적 글쓰기.” 『독어독문학(구 독일문학)』 88: 104-122.
- 안새롬. 2020. 「전환 담론으로서 커먼즈: 대기 커먼즈를 위한 시론」. 『ECO』 24(1): 333-370.
- 안새롬·윤순진. 2021. “한국의 대기·기후 운동으로 본 대기 커먼즈 정치 유동하고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해 말하기.” 『공간과 사회』 75: 60-101.
- 안젤리스, 마시모 데(Massimo de Angelis). 2019. 『역사의 시작』. 권범철 역. 갈무리.
- 엘리노어 오스트롬.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안도경 역. 랜덤하우스.
- 윤여일. 2022. “도시 속 공터는 어떻게 공유지가 될 수 있는가: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술방울커먼즈를 상호비교하여.” 『공간과사회』 32(4): 45-89.
- 윤여일·최현. 2023. “21세기 한국학계 공동자원 연구의 전개와 과제-공동체 공동자원과 공중 공동자원 연구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5: 45-77.
- 윤영광. 2022. “커먼즈의 제현권력: 공적인 것과 공통적인 것의 관계에 대한 시론(試論)”. 『2022년 커먼즈 네트워크 포

21) 이 문서는 추후 웹페이지로도 제작되어 공유될 예정이다.

- 럼 자료집』.
- 윤영광. 2022. “네오오페라이스모의 커먼즈론 - 자본의 코뮤니즘이라는 역설의 문제화”. 『시대와철학』 33(3). pp.101-138.
  - 이광석. 2021. 『피지털 커먼즈』. 갈무리.
  - 이승원. 2020. “포퓰리즘 시대, 도시 커먼즈 운동과 정치의 재구성” 『문화과학』 101: 79-97.
  - 이승원. 2023. “도시 구성체와 도시 커먼즈: 대안적 도시 전환을 위한 개념적 고찰.” 『공간과사회』 33(4): 172-213.
  - 잉골드, 팀. 2024. 『라인스: 선의 인류학』. 포도밭출판사.
  - 장훈교. 2022. “한국 공동자원화 사회운동의 부상”. 『공동자원체제』. BOOKK. pp.448-474.
  - 정기황. 2021. “국(공)유지, 무엇(누구)을 위한 땅인가?.” 박배균 외 엮음. 『커먼즈의 도전: 경의선공유지 운동의 탄생, 전환, 상상』. 빨간소금. pp.44-71.
  - 정영문. 2002. 『중얼거리다』. 이마고.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환경사회학 연구 ECO』 20(1): 399-442.
  - 정영신. 2020. “한국의 커먼즈론의 쟁점과 커먼즈의 정치.” 『아시아연구』 23(4): 237-260.
  - 진노 나오히코, 이재은 역. 2000. 『체제개혁의 정치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찰스 틸리, 이승협·이주영 역. 2010. 『위기의 민주주의』. 전략과문화.
  - 최명식. 2022. “도시 커먼즈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공간과 사회』 32(4): 90-122.
  - 최현. 2013. “공동자원 개념과 제주의 공동목장.” 『경제와사회』 98: 12-39.
  - 최현. 2019. “공동자원의 새로운 정의와 제주의 공동자원: 바다밭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3(1): 7-33.
  - 파슨스, 탈코트. 1999. 『현대 사회들의 체계』. 새물결.
  - 한국토지공사. 1997. 『분당 신도시개발사』.
  - 한윤애. 2016. “도시공유제의 인클로저와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반란적 공유 실천 운동.” 『공간과사회』 26(3): 42-76.
  - 해러웨이, 도나. 2021. 『트리블과 함께하기』. 마농지.
  - 홍덕화. 2019.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과 에너지 커먼즈의 가능성” 『환경사회학연구ECO』 23(1): 75-105.
  - 홍덕화. 2022. “커먼즈로 전환을 상상하기.” 『환경사회학연구 ECO』 26(1): 179-219.
  - 홍지은. 2022. “커먼즈를 둘러싼 정치와 변동하는 도시 커먼즈 : 청주시 산남 두꺼비 생태마을을 중심으로.” 『환경사회학연구 ECO』 26(1): 53-92.
  - 황진태. 2023. 「도시 커먼즈 생산을 위한 국가의 역할 모색」. 《국토》 506: 31-36.
  - 황희연. 2001. “분당 신도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도시문제』 36(386): 24-40.
  - Connerton, Paul. 2009. *How modernity forge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din, Garrett.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population problem has no technical solution; it requires a fundamental extension in morality.” *Science* 162(3859): 1243-1248.
  - Ingold, Tim. 2007. *Lines: A Brief History*. Routledge.
  - Russell, B. 2015. “Beyond activism/academia: militant research and the radical climate and climate justice movement(s).” *Area* 47(3): 222-229.
  - Schumpeter, J. 1991[1918]. “The Crisis of the Tax State.” in Joseph A. Schumpeter: *The Economics and Sociology of Capitalism*, edited by R Swedberg.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온라인 자료]

- 웹진 공유도시 2022년 12월호. [커먼즈 네트워크 소식] 2022 커먼즈 네트워크 포럼 + 공유도시 박람회 리뷰. <https://commonscity.com/> (2024.02.24. 접속)
- 커먼즈네트워크 웹사이트. <https://www.commonsnetwork.or.kr/>